

국회보

Since 194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Vol. 654

2021. 05

보다



다이내믹, 의정

곧은 시선으로 멀리 보면서 항상 국민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국회보

2021 May vol.654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1년 5월 3일

발행인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전상수 위원장(입법차장)

이승재 위원(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위원(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위원(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익섭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선춘 위원(기획조정실장)

이상현 위원(법제실장)

한웅현 위원(문화소통기획관)

박기현 간사(문화소통담당관)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제방훈(보좌관), 한주연(비서관), 하상우(서기관)

편집실무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02)2266-1897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함께 걸어갈 길을 찾기 위해
오늘도 높은 곳에 홀로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는 모두를
위한 길을 찾아내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4 지금 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앙아시아 3개국(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 ‘제1회 한·유럽의회 의장대화’ 개최
4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특집 _ 과학인재 육성 방안

- 14 팬데믹의 파도를 넘어 과학으로 융성하는
행복한 나라로 _ 이준호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_ 안준모
재직 과학기술인 역량 강화 전략 _ 박귀찬
과학기술인재 강국 도약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 _ 강성욱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국회의 입법 대응 _ 연광석
- 24 상임위 여야 간사에게 듣는다
“고용안정과 근로개선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_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_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28 길에서 길을 찾다 _ 임호선 의원
‘한반도 성장 동력의 중심’ 꿈꾸는 충북 증평·진천·음성
- 32 칭찬합니다 _ 장혜영 의원
‘희망의 문턱’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 34 의원의 좌우명 _ 김영식 의원
바른 근본 위에서 바른길을 가는 삶의 원칙
- 36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 이동주 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 펼칠 것”
- 38 의원기고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사의 분리 실시를 제안한다 _ 박영순 의원
- 40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발전공기업,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48 새 법률 소개
공직자 부패행위 사전 예방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등
안건 50건 의결

56 법률 시대를 읽다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에 관한 법률’ 제정 _ 배용근

58 국회 주재관 리포트

프랑스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입법 동향 _ 김정연

60 법 시행 그 후

‘소상공인기본법’

62 만화

학생연구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합니다

64 위원회는 지금

국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긴급 현안질의 등
실시

68 국회 뉴스

76 국회 사람들

“의회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을 카메라로 중계합니다”

78 새로 읽는 중앙아시아사

유목민들 사이 중국을 대표하게 된 탁발선비족의
북위(北魏) _ 이광태

82 수목원 탐방

대전 한밭수목원

86 바이러스의 역사

유럽의 목욕 문화를 쇠퇴하게 만든 ‘매독’ _ 도현신

88 국회 미술관

재현의 회화술을 넘어서는 사건으로서의 회화 _ 김준기

91 국회의 풀꽃과 나무 이야기

진분홍색으로 물든 ‘꽃잔디’

92 오천 년의 숨결, 우리 유물을 찾아서

그림보다 더 그림 같은 백제 ‘산수무늬 벽돌’ _ 이광표

96 대한민국 문학기행

높은 산 맑은 물에 깊어지는 문학의 향기, 사람의 향기
_ 장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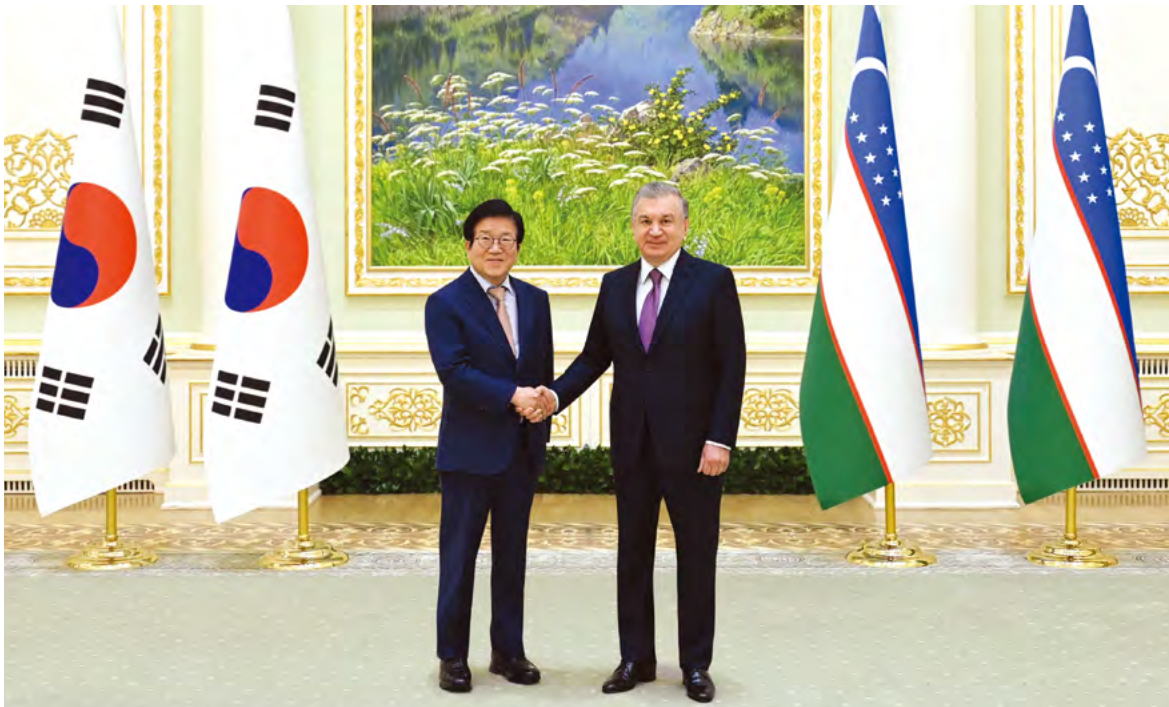
100 생활 속 우리말글

자주 쓰는 ‘약어’라도 본말과 함께 사용하세요 _ 김형주

101 정치 관련 주요 일지

박병석 국회의장, 중앙아시아 3개국 공식 방문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박병석 국회의장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4월 6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집무실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했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이자 최고위급 방문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의 공식 방문이다.

박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3개국의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장 등 최고 지도부를 만나 내년 한국과의 수교 30주년 계기로 양자관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ODA(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등 개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 보건의료, 에너지, 농업, 섬유산업



4월 1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월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루스탐 에모말리 타지키스탄 상원의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치·경제 분야의 호혜적 관계를 대폭 강화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타지키스탄 ‘윈-윈’ 경제협력 추진하기로

박병석 국회의장은 4월 1일 타지키스탄 수도 두산베에서 루스탐 에모말리 상원의장과의 회담으로 공식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박 의장은 회담에서 “올해는 한국과 타지키스탄 양국 관계에 획기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두산베 분관이 한국대사관으로 승격되고, 타지키스탄은 ODA 중점협력국으로 한 단계 격상됐다”며 “앞으로 한국 기업의 타지키스탄 투자를 위해 한국 코트라의 지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수자원 활용과 수력발전 같은 에너지도 양국이 협력할만한 분야라고 본다. 또한 한국은 광

물·바이오·관광분야 협력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추진 중인 14개 조약 협정들이 있는데, 이 조약들의 조기 타결도 투자 활성화에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같은 날 오후 타지키스탄 대통령궁에서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한국의 자본·기술과 타지키스탄의 자원을 결합하는 ‘윈-윈(win-win)’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의 4대 핵심인 에너지, 식량안보, 산업 다변화, 인프라 확충은 양국 관계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해주시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타지키스탄은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 민간기업의 유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자유경제지대를 통해 공동협력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4일 키르기스스탄 이식쿨주 출폰아파시 소방서 착공 서명서를 타임캡슐에 봉인하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므로, 경제 통상 분야에서 양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지정해서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한국·키르기스스탄, 농업·섬유·관광 등 경제협력 확대 한목소리

키르기스스탄으로 이동한 박병석 의장은 4월 4일 이식쿨주 출폰아파시 소방서 착공식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한국은 올해부터 키르기스스탄을 ODA 개발 협력의 중점협력국으로 승격시켰고, 앞으로 5년간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양국 협력이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엘치벡 잔타예브 이식쿨주 주지사는 “새로 짓는 소

방서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키르기스스탄과 이식쿨주 주민을 대표해 한국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박 의장님의 방문을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가 한 단계 더 격상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화답했다. 출폰아파시 소방서는 한국과 UNDP(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가 키르기스스탄에 새로 짓는 소방서 4곳 중 첫 번째다. 박 의장은 소방서 착공 서명서를 타임캡슐에 봉인하는 행사에 참석한 뒤 현지 언론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박 의장은 이어 4월 5일 비슈케크의 알라 아르차관저에서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 탈란트 마미토프 국회의장, 울루크베크 마리포프 국무총리 등 키르기스스탄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회동을 가졌다.

박 의장은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5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을 비롯한 우리 방문단이 4월 5일 탈란트 마미토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과 확대회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키고 농업, 섬유, 관광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직항로 개설, 관광비자 발급 요건 개선,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 등 양국의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가장 먼저 만난 마미토프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 “양국 경제공동위원회는 물론 비즈니스 포럼과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미토프 의장은 “키르기스스탄은 한국을 아시아 최우선 파트너 중 하나로 생각한다. 2020년 코로나 19 유행 이후 한국이 제공해 준 물질적, 기술적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개표기 및 프로그램 지원, 관광비자 발급 요건 개선, 코이카 개발협력 등을 요청했다.

이에 박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개표기 및 프로그램 지원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키르

기스스탄 의회의 전자화는 양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자파로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양국 간 직항노선을 승인했고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직항노선이 개설되면 보다 많은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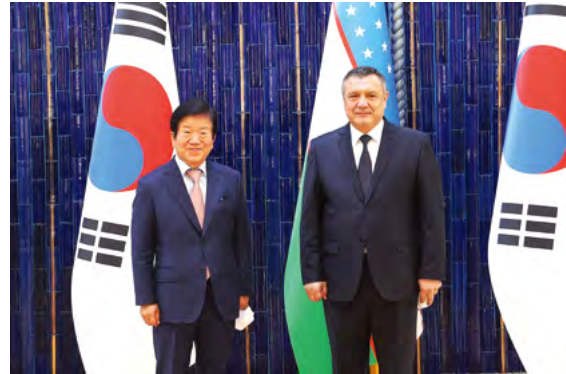
이어 박 의장은 마리포프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농촌·관광·수자원·섬유·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은 물론, 키르기스스탄이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도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코로나 상황 안정세 유지”

마지막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한 박 의장은 4월 6일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과 회담을 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6일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6일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작했다. 박 의장은 양국이 협상 중인 한국-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STEP·Agreement for Sustainabl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의 조기 타결을 촉구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화상 정상회담에서 STEP 협상 개시를 선언한 바 있다.

박 의장은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STEP 협상이 좀 더 속도내기를 기대한다. 중앙아시아와 맺는 첫 STEP 협정이 양국 관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은 “아랄해 복구사업을 위해 10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하는 등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리 정부는 사막화가 진행된 아랄해 복원을 위해 UN 인간안보 다자신탁기금에 자금을 공여한 바 있다.

상원의장과의 회담 이후 박 의장은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과의 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그동안의 양국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에도 한국이 계속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은 “한국 정부에서 진단키트와 코이카를 통한 500만 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해준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을 잘 해결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박 의장은 현지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회담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우즈베키스탄, 깊은 신뢰 속 변영의 동반자”

이어 박 의장은 같은 날 오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만나 양국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무역, 교육, 혁신 성장, 산업 다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약속했다. 박 의장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양국 의회 대표단이 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뤄진 면담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중심, 혁신 성장, 산업 다변화 정책에 한국이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리는 진정한 친구다. 국제무대에서 한 약속, 양자 간의 합의를 성실하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양국 간 경제협력과 관련해 박 의장은 “지난 1월 양국 정상 화상회의에서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대외경제협력기금)를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2배 증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약속한 것”이라며 “무바렉 발전소, 부하라 정유공장 등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EDCF 증가와 대형 인프라사업 등 여러 협력사업이 양국 경제협력 확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무바

렉 발전소와 부하라 정유공장은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교역을 50억 달러 확대하자는 약속도 지키려 하고 있다”며 “한국의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꼭 한국을 방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중앙아시아 3개국의 수뇌부와 모두 만났다. 연쇄회담을 통해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다지고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무역협정 체결과 한국 기업의 인프라 참여를 촉구했으며 직항로 개설 등 실질적인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임종성·박영순·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양금희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최종길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고윤희 공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 ‘제1회 한·유럽의회 의장대화’ 개최

코로나19 백신 수급, 기후변화 대책 등 현안 논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20일 다비드 마리아 사슬리 유럽의회 의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4월 20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다비드 마리아 사슬리 유럽의회 의장과 화상으로 ‘제1회 한·유럽의회 의장대화’를 갖고,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기후변화 대책 등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로 유럽의회 의장과 회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측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와 유럽의회가 더욱 높은 수준의 한·EU 관계를 견인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슬리 의장은 “지금 유럽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평

장히 어려운 시기”라면서 “한국이 코로나 방역을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또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세 가지 핵심 협약을 비준한 것을 축하한다”면서 “한국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한국은 개방성, 민주성, 투명성 세 가지 원칙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원활히 진행 중이지만 백신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유럽에서 생산되는 백신이 적시에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유럽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일



다비드 마리아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과 화상회의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

본이 오염수를 처리하는데 있어 엄격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처리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인접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이 검증단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8천만 명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며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경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EU가 대북제재를 이행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위해 일관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 “EU는 그린딜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그린 뉴딜을 추진 중”이라며 “양측이 협력을 통해 발전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우리 정부는 5월 말 P4G 화상정상회의의 개최를 준비중”이라며 “EU정상도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는 전 세계 공공·민간기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녹색 성장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가속화를 위한 다자 협력네트워크로, 대한민국, 덴마크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년마다 정상급 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박 의장은 “대한민국과 EU는 기본협정, 자유 무역협정(FTA) 등 정부·경제·안보 분야의 3개 핵심 협정을 최초로 모두 체결한 사실상의 준동맹”이라고 평가했고, 사솔리 의장은 “오는 10월 이탈리아에서 G20의회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 자리에서 박 의장님과 많은 이슈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꼭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회 본회의, 공직자 부패행위 사전 예방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등 의결



국회는 4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47건·규칙안 1건·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하정구) 추천안 등 총 5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공직자 190만 명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개정안’ △가맹사업 시장 질서를 위해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마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시장 건전성 제고

법안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민권의 증진 법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재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법’ 등 국민 관심 법안 등이 처리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4월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여야는 4월 1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0일에는 경제 분야, 21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했다. 🏠



[특집]

과학인재 육성 방안

팬데믹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속에서 관련 기술 및 인재 확보가 국가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인재 확보에 앞장서고 있는 AI(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한국은 조사 대상 15개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데이터 분야 인력 역시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편집자주>



팬데믹의 파도를 넘어 과학으로 융성하는 행복한 나라로

이준호 서울대 자연과학대 학장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재직 과학기술인 역량강화 전략

박귀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원장

과학기술인재 강국 도약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

강상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국회의 입법 대응

연광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팬데믹의 파도를 넘어 과학으로 융성하는 행복한 나라로



이준호 학장
서울대 자연과학대

지난 2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가 확정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인재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 구상의 출발선은 두 가지 미래 전망, 즉 팬데믹과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엄청난 불확실성으로 예측이 쉽지 않은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인구 감소의 위기까지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수준 높은 과학기술인재 확보만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러한 진단에 따라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예상을 능가하는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제과학기술 지형이지만 정확한 판단과 긴 안목을 가지고 설계된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5년 후 과학기술인재의 양과 질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으로 경제를 일구어왔고, 그 기반이 된 과학기술로서는 선진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따라잡을 선진과학기술이 없는 분야가 늘어나는 등,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앞서서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세계가 놀랄 만하다.

지금껏 세상에 없었던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창의적 과학기술인재가 그 기반이 될 것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의 기본철학은 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 역량강화에 있다

는 점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를 재빠르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응해 우리가 그 변화를 요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큰 철학적 변화가 이번 기본계획에 담기게 된 것이다.

계획 뒷받침할 통계 작업, 제도적·예산 지원 중요

이번 기본계획은 변화 대응력을 갖춘 기초과학기술, 인재 규모 유지(또는 확대), 그리고 생태계 고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청년 연구자, 과학기술인이 지속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반, 그리고 인재생태계의 개방성·역동성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계획이 제안되었다.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의지, 그리고 제도적 지원과 예산이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기본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해야 할 일로는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는 확실한 통계를 만드는 작업을 들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인원이 어떤 경로로 과학기술계에서 활동하는지 등 자세한 통계가 있다면 미래 전략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 대학원 졸업생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한 정책 기반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의 구체적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부처 간 협력이다.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사업계획이 포괄적인 철학을 담은 기본계획으로만 수립되는 것이라 그에 기반한 구체적 사

업들이 탄탄하게 뒷받침돼야 한다. 기본계획의 완성을 위해 무려 14개 부처가 참여했고,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들은 하나의 부처가 수행할 수도 있고 다부처 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최근에 이공계 대학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추진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예다. 부처 간 협력사업에서는 서로 배려와 이해를 도모하면서 정책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여한 담당자 또는 기관들에게 공정한 평가와 충분한 공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우수 인재가 우리나라에 선순환적으로 머물 수 있는 연구생태계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출한 우수한 박사들은 많은 경우 해외로 진출했으나 그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들어오지는 않았으니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우수인재의 순 유출 상황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처럼 인브리딩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재들이 유출되는 이상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제안해본다. 특히 팬데믹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K-방역 선진국으로서의 명성이 높아져 세계적 팬데믹 위기가 우리나라로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정부와 과학계가 함께 노력해나가야겠고, 무엇보다 제도적 개선과 예산 지원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지식의 전달, 창출, 확산을 통해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사회가 대학에게 900여 년간 요구해온 기본적인 역할이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까지 전례 없이 빠른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대학의 인재 육성 전략 변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의 동인은 인재부족과 비대면 환경이다. 인재부족의 경우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재가 부족한 상황인데, 특히 고급 인공지능 기술 인력수급 격차는 심각하다. 내년에는 약 1만 명의 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같은 인재부족 현상은 해외도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라는 제약적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디지털 양극화와 이로 인한 학력격차가 대학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수학·물리 등 기본기에 집중하고 다양한 방법론적 혁신 필요

첫째, 지식 전달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기본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디지털 기반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전반적인 기술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 이 같은 경향성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외부 환경변화에 지나치게 동기화하는 것이 좋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많은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인공지능학과, 블록체인학과



안준모 교수
고려대 행정학과

등을 만들고 있지만,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그 자체가 최종목표가 아닌 수단적 기술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같은 기반기술은 다른 분야의 기술과 접목되어 사용될 때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에서는 수학과 물리 같은 기본기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융합의 확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의 우수 공과대학들은 대수, 미적분학 등의 기초수학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단순한 코딩지식보다는 알고리즘적 사고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4년제 학부 시스템 때문에 재학생의 학습환경과 졸업 후의 구직환경에 시차가 있음을 고려해 학생들의 기본기를 길러주면서 다양한 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기 강화전략이 중요하다.

둘째, 학습자의 사용자 경험 제고,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적 혁신이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대학이 기존의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수업도 가능하고 소극적인 학생의 채팅참여 등 다양한 장점도 있지만, 비대면 수업이 제공하는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제한된 상호작용, 디지털 자원차이에 인한 수업환경 양극화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암묵지적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실험과 실습이 중요한 이공계 교육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는 과학인재 육성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해답에 대한 실마리는 기업의 마케팅에서 찾을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보여주기 어렵기 때

문에, AR/VR 같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예: '가상 모델하우스')를 하고 있다. 개인별 맞춤 수업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에듀테크(Edu-Tech, 교육과 정보통신 기술의 결합 산업)가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기본기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재직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 대학이 생각하는 가장 큰 피교육 대상은 학부생이다. 그러나 점점 짧아지는 기술개발 주기를 고려하면 한번 교육을 받고 평생 직업을 선택하는 기존 체계가 변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고착화되는 인재부족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기본기가 충실한 재직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의 효율을 높이는 효율적인 대안전략이 될 수 있다.

대학의 이 같은 변화를 위해서는 입법, 행정부의 전폭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의 정원, 등록금 등에 대해 많은 규제가 존재하는 현재의 대학행정 시스템하에서는 대학이 변화를 위한 과감한 시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경직화된 법령, 전근대적인 감사, 높은 R&D사업 관리 부담보다는 대학이 스스로 고민하면서 혁신의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에게 면책과 자율권을 담보할 수 있는 '대학 샌드박스' 도입과 취약한 대학재정에 대한 과감한 투자, 현재의 정책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 과학인재 육성은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재직 과학기술인 역량강화 전략



박귀찬 원장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지난 2월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이 확정됐다.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은 초등학생에서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재직자·여성·고경력자, 해외인재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맞춤형으로 수립됐다. 이 중 직전 3차 기본계획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 재직 과학기술자 지원이 강화됐다는 점인데, 이는 사회변화 가속화, 과기인재 부족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먼저, 모든 것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 들어 산업 지형과 업무 방식이 재편되면서 변화 대응이 시급해졌다. 특히 2024~2028년 과기 분야 학사 이상 인재가 4만 7천여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대규모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재직 과학기술인의 경력심화·전환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상황이 다급하지만 현재 재직 과학기술인 경력개발 및 재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를 수행할 전문기관도 과기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이 유일하다. 미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재직 과학기술인 역량강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확보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과기인재를 교육할 수 있는 전담 교육기관을 지정·육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재직 과학기술인 역량강화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과학인재 핵심역량 제시하고 경력개발 지원 확대해야

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패러다임이 과업 중심의 직무교육에서 역량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점차 개인의 보유 지식보다 변화 대응, 학습능력 등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기본 자질이 강조됨에 따라 가이드로서 역량모델 제시는 필수적이다. 역량모델(Competency Model)은 성과창출에 기여하는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을 정의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과학기술인에 특화된 모델을 제시하고자 과기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을 총 95가지로 도출해 공통 8개, 리더십 15개, R&D 72개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한 특화된 체계를 마련했다.

역량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공통의 경우, 전문성과 의사소통이었다. 리더십 역량은 보직자는 비전제시공유, 책임자는 동기부여, 실무자는 자기관리, 예비 과학기술인은 문제해결능력이었다. R&D역량은 직군별로 필요역량을 구분했는데, 모든 직군에서 갖추어야 할 9개 역량을 제외하고는 연구직은 성과활용, 연구행정직은 경영전략 수립, 연구관리직은 연구성과 관리가 최우선순위였다. 역량모델 수립은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단초다. 이를 기준삼아 정부와 기관은 재직자 교육훈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고 개인은 성장목표를 세울 수 있다. 필요역량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를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재편해 교육 등에 적시에 반영할 때 재직 과기인재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역량모델 수립과 함께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이란 개

인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직업 기회와 성장목표를 조율해나가는 전 과정이다. 전문성이 높고 성취지향적인 과학기술자의 경우 자기주도적으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영국은 이미 2008년부터 연구자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VITAE'라는 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연구자의 경력단계별로 성장목표를 제시하고 자기 현재 수준을 진단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국도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에서 박사후 연구원 등 신진 과학기술자를 위한 경력관리 프로그램 'myIDP'를 통해 경력 목표를 세우고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직 과학기술자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KIRD에서 자체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과학기술 재직자 경력개발 플랫폼 'K-클럽'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였다. 현재 경력진단, 경력 성공 스토리 제공, 재직자 경력개발 자가설계 교육, 경력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에 재직자 경력개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것은 시기적절하다. 경력개발과 함께 역량 교육·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을 지원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가 성장의 밑거름이다. 재직 과학기술자 역량강화는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놓칠 수 없는 대업이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재직자들이 양질의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제도 마련과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

과학기술인재 강국 도약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

최근 팬데믹,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 신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핵심인재 영입·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미국은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에 5천8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중국도 천인계획, 만인계획에 이어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과 학과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시선을 돌리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19-2028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결과에 따르면 2028년까지 10년간 과학기술분야 학사 이상의 신규인력이 약 5만5천 명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우수인력을 영입하기 위한 국내 IT기업의 경쟁과 인력난도 가시화되고 있으며,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이공계 인력 신규 확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대전환 시기에는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본역량이 탄탄한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과학기술인의 허리에 해당하는 청년 인재가 마음껏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여성 등 다양한 인재들 한 명 한 명이 경력단절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인재강국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지난 2월, 위와 같은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과학기술인력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대전환의 시대,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인재 강국’을 비전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생의 수학·과학 역량 제고를 뒷받침할 지능형 과학실을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구축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스타브릿지센터’를 권역별로 구축한다. 또한 초·중등 학교급별 인공지능 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AI교육 선도학교를 확대하여 미래세대의 디지털 기초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과학영재 발굴과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우수인재가 이공계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금년 중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이공계 대학의 교육혁신과 연구경쟁력 강화 내용 등이 포함된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두 번째로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 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및 연구실사고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구축한다.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세종과학펠로십을 통해 박사급 연구자

에 대한 안정적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산업계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닥 중심의 연구단 운영도 강화한다.

세 번째,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하여 여성·고경력 등 다양한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우선 여성 과학기술인의 생애 전 주기적 지원시스템(W-브릿지)을 구축하고 일-가정 양립 연구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과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인 평생교육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끝으로 과학기술인재 생태계의 개방성·역동성 강화를 위해 해외 인재의 비자제도 개선과 정착지원을 통한 국내 유입을 활성화한다. 또한 근거 기반의 과학기술인재 정책 수립을 위해 금년부터 이공계 대학원 총조사를 실시한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사회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장래를 전망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중심을 잡고 극복해나갈 수 있는 국가의 기본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와 저력을 발휘해 왔다. 이번 제4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을 발판 삼아 변혁의 시대를 주도할 인재가 많이 등장하여 이들이 과학기술인재 강국을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핵심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본다. 🏠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국회의 입법 대응

환경·에너지 등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 기술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기술혁신의 GDP 기여도가 1970년대에는 12.8%였으나 1990년대에는 55.4%로 상승했고, 미국 교육부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일자리 증가율 평균이 14%인데 컴퓨터시스템분석가 22%,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32%, 그리고 생명의학공학분야가 62% 증가했다고 하는 등 창조적 과학 기술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이제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국회가 기울인 입법적 노력과 성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과학인재 양성과 보호 위한 다양한 조치 마련

첫째,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력과 산업양성을 위한 노력이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SW 신기술의 융합은 기존 산업 간, 온·오프라인 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을 야기했으며, 디지털 전환 역시 가속화되고 있어 과거와 다른 새로운 핵심역량으로서의 SW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요구된다. 이에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원시코드를 공개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보급 관련 시범사업 실시나 소프트웨어기술자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정부 차원에서 나서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했고, 추가로 일선 학교의



연광석 입법심의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교육이 충분하지 않아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 진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둘째, 연구 종사 인력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이나 연구기관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적 노력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큰 폭으로 개정했다. 연구실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정부의 책무를 강화했고,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교육 의무화 등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이외에도 연구실 안전에 특성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전문자격 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에서의 과학인재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2030년까지 약 3경 원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을 놓고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 점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전환, 에너지 시스템의 분산화 등 최근 에너지산업이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며 에너지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기술격차 해소가 시급함을 고려해 에너지 분야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제정했다. 미래 에너지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구 플랫폼 확보를 통한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나, 기존의 대학들은 경직적 교육체계 등으로 인해 혁신모델 창출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 선제적 입법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미래사회를 이끌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를 창

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미국,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의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강화는 물론 컴퓨터과학도 포함시키기 위해 '과학교육 진흥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제명을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바꾸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시책을 마련토록 하며,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과학·수학·정보교육융합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노령화 진행에 따라 뇌 연구가 중요해지면서 '뇌연구촉진법'을 개정해 뇌 연구 기반 조성을 통해 뇌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뇌 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뇌 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의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처럼 국회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과학인재 양성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조치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현재 계류 중인 '청색기술개발촉진법'에서는 오랜 기간 최적화된 자연의 높은 에너지 효율과 자체 정화능력 등을 모방·응용할 수 있는 청색기술이 인류의 미래 핵심 기술로 발전될 것에 대비해 청색기술 인력양성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청색기술센터와 청색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고용안정과 근로개선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Q_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여당 간사위원님께서 각오와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1995년 3월 3일 제14대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으로 ‘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후 전북 의원 최초로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거는 기대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용위기는 물론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민의 노동권과 환경권을 지켜야 하는 시대의 과제 앞에 여당의 환노위 간사위원으로서 어깨

가 무겁습니다만 ‘일하는 국회’를 촉구하신 국민을 위해 ‘공존과 상생, 전환’을 모토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의 핵심적 대안으로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꼽고 있는데 둘 다 실행해야 할 상임위입니다. ‘2050탄소중립’을 위해 올 해는 이를 입법적으로 실행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또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비롯해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

자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Q_ 지난해 환노위가 거둔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작년 국감에서 택배기사 과로사, 화물차 운전기사 산재보험 적용, 대리운전기사 및 경륜선수 노조 설립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입법 및 정책적 대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제가 노동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용사정이 좋지 않아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부터 시작됩니다. 또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환경’ 분야로는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21대 첫 해 국감의 현장시찰을 용담댐 주변지역으로 정해 여야의원님들 모시고 피해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 결과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난 3월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을 통해 피해주민들이 신속 구제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Q_ 현재 환노위의 가장 큰 이슈와 현안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그린뉴딜의 핵심 법안인 ‘기후위기대응법안’을 조속 심의·처리해야 합니다. 작년 환노위에서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경험이 있는 만큼 실제 탄소중립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취지를 담은 본 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또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리두기에서도 대면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의료 종사자, 택배·배달·대리기사, 돌봄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해, 이들의 노동권 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등 권리 보호에 필요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저도 발의했지만,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위원님들이 발의한 노동 법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노력중입니다. 퇴직연금이 220조 원 적립되어 있는데 0%대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이 1~2%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노후보장이 미흡할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상반기 중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_ 마지막으로 야당 간사님이신 임이자 의원님께 칭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임이자 간사님은 여야가 첨예하게 갈릴 것은 갈리더라도, 합심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들은 신속히 추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통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었던 것에는 임이자 간사님의 역할이 크셨고, 저는 그러한 임 간사님의 결단력이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방향 설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

글 윤성혜 사진 김진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경상북도 상주시문경시

Q_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야당 간사위원님께서 각오와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제20대국회에서 노동계 대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시작했고, 2016년 12월부터는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로 선임되어 활동했으며 제21대국회에서도 현재 간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해결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동안 환노위에서 간사로 활동하며 첨예한 대립의

노·사관계 한가운데서 수많은 갈등을 해결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노위 간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개혁과 동시에 불법적 횡포를 일삼는 특권귀족노조의 개혁으로 노동개혁을 완수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개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힘쓸 것입니다.

Q_ 지난해 환노위가 거둔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무엇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요소수’ 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필수인 ‘요소수’ 성분 검사를 실시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적발하고, 이후 환경부의 사후관리와 지도·점검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담합행위를 저지른 불법업체와 사실상 쌍둥이였던 업체와 계약한 기상청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후 기상청으로부터 제도 개선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냈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수상한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 게이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전국 2천559개의 사회적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의 공제사업 전반이 고용노동부의 묵인, 방조로 인해 현재 공제사업단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몇몇에 의해 운영되는 재단법인의 성격으로 변질됐습니다. 이에 노동부 해당 부서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한 공제사업을 위해 법정단체화를 추진 하고자 합니다.

Q_ 현재 환노위의 가장 큰 이슈와 현안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환노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구 평균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

입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비전 제시와 실효적 대안 마련을 위해 환노위 소속 위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노동분야 현안으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산재청문회를 열어 산업재해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 산업현장의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1년 전이기는 하지만, 노동계는 형벌과 징벌 배상 정도가 너무 낮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입법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력한 기업처벌법인 만큼 향후 사업주나 CEO에게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게 하는 정치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대한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악의 법제정 방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법 시행 전 이런 우려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입법보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_ 마지막으로 여당 간사님이신 안호영 의원님께 칭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호영 간사님은 강인하면서도 따뜻함을 겸비한 인물로 통합니다. 참여한 이슈가 많은 상임위원 만큼 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강하게 맞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하십니다. 국민의 노동권과 환경권을 지키는 정부 여당의 환노위 간사로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와 국민의 편에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

글 윤성혜 사진 김진원



진천 농다리에서.

‘한반도 성장 동력의 중심’ 꿈꾸는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꽃이 진 자리마다 새잎을 돋우며 부지런히 봄을 채워가는
자연의 손길이 반갑고 소중한 5월이다. 한껏 무르익는 봄 햇살
아래 부드러운 바람을 친구 삼아 ‘중부3군(증평·진천·음성)’의
임호선 의원을 만나러 길을 나섰다.

봄향기 가득한 진천 농다리와 힐링 명소 증평 좌구산 휴양림



임호선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비옥한 농토, 후덕한 인심 덕분에 ‘생거진천(生居鎭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이 진천”이라고 자랑하며 지역 소개를 시작했다. 이날 임 의원과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돌다리로 유명한 진천 농다리였다.

“진천 농다리는 얼핏 보면 돌을 깔거나 다듬지 않고 얼기설기 얹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물살에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 축조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천년 세월동안 끄떡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진천 농다리는 요즘 방영 중인 드라마의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더욱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농다리 주변에는 생태문화공원과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갈대 습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데크 쉼터, 식물원, 치유정원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농다리전시관을 증축하고 먹거리장터와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농다리 관광 명소화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타산에 설치된 한반도전망대는 초평호를 내려다보면서 한반도의 지형과 청룡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진천의 또 다른 명소다.

“국내 여러 곳에서 한반도 지형을 볼 수 있지만 제주도까지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초평호의 물줄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용이 꿈틀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빼어난 반면 전망대까지 오르는 길이 좁고 주차장이 협소한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진입로를 넓히고 케이블카나 쥘라인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증평 좌구산 휴양림은 예로부터 행복과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가 앉아 있는 형상인 좌구산에 조성된 힐링 공간이다.

“휴양림 안에는 산림욕장, 등산로, 산책로 등이 잘 구성되어 있고 숲 명상의 집, 명상구름다

진천 한반도 지형
전망대





증평 좌구산 휴양림
명상구름다리에서

리, 좌구산천문대 등 체험 시설과 눈썰매장, 숲속모험시설 등 레포츠 시설도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명상구름다리는 좌구산 서쪽 자락의 협곡을 이어주는 다리로, 다리에서 내려 다보는 경치가 일품입니다. 또 좌구산천문대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356mm 굴절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어 천체의 생생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음성 국립소방병원과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의 현장 충북혁신도시



2024년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국립소방병원이 건립될 예정이다. 임호선 의원이 2020년 9월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이 확정됐다.

“현재 소방전문치료센터로 경찰병원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화재 진압 도중 발생한 화상이나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총 사업비 1천328억 원을 투입하는 국립소방병원은 300병상, 21개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화상, 정신건강, 재활, 건강증진 등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치료와 검사, 치유 등을 맡게 됩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과 MOU를 체결해 서울대병원의 최고 의료진이 진료·연구·운영 등을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호선 의원은 “국립소방병원이 들어서면 3차 병원이 없어 긴급 상황 시 대처가 어려운 중부3군과 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치하고 있어 IT 교육의 최적지로 꼽히는 충북혁신도시는 지난해 8월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이날 임호선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찾아 카이스트와 연계한 영재교육 및 체험관 운영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곳에서는 언택트(비대면) 특화교육을 위한 ICT 인프라 구축, 5G실감 교육콘텐츠 개발과 학습터 구축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고, 인공지능(AI) 영재학급 조성과 IT 스카우트(학생단) 운영, 버추얼클래스(방과후 화상교육) 운영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 등 물류 중심지 도약 기대”



경찰대를 졸업하고 충주경찰서장, 진천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 교육정책관, 교통국장, 경찰청 차장을 역임하며 3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활동한 임호선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여의도에 입성했다.

임호선 의원은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망과 연결되지 않은 곳”이라며 “우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내륙선과 중부내륙선 지선 구축을 포함시켜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도권내륙선은 동탄~안성~진천선수촌~충북혁신도시~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사업이고, 중부내륙선은 수서~광주~부발~감곡~충주~문경을 잇는 사업이다.

“중부3군은 평균연령 31세의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루 70만 건을 처리하는 CU 중앙물류센터가 진천에 있고 롯데 메가허브터미널도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음성에는 올해 8월 착구장 14개 규모의 쿠팡 물류센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중부3군은 그동안 철도교통으로부터 소외돼 주민 불편과 산업발전 저해 등의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충북선 고속화를 비롯해 수도권내륙선과 중부내륙선 지선은 철도 수혜지역 확대로 지역 간 상생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충북 철도망 구축을 통해 중부3군이 한반도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좋은 법과 제도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기겠습니다.” 🍀

충북 증평·진천·음성 | 글 김현아 사진 김진원

충북혁신도시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체험관을 둘러보고 있는 임호선 의원



음성 화훼단지에서 화훼 농가 주인과 함께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용인시정



장혜영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5월호 ‘칭찬합니다’ 주인공은 장혜영 의원이다. 그를 추천했던 이탄희 의원은 “장혜영 의원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제21대국회의 가장 용기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공익단체에서 처음 알게 되어 함께 강연도 했는데, 이렇게 국회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다. “본회의장에서 옆자리 짝꿍까지 된 걸 보면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이탄희 의원님은 당적을 떠나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분입니다.”

‘희망의 문턱’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발달장애 동생은 내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

지난 2월 장혜영 의원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TIME)’이 선정한 ‘떠오르는 인물 100인’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선정됐다. 타임지는 장 의원을 “한국에서 가장 젊은 정치인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며 “인권운동가로 활동해왔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감독, 작가, 크리에이터, 싱어송라이터, 장애

인운동가... 장혜영 의원은 국회 입성 전부터 화려한 이력으로 화제를 몰고 다녔다. 2011년 대학 재학 시절 학벌주의와 대학의 무한경쟁을 비판하며 ‘공개 이별 선언문’이라는 대자보를 학교에 걸고 자퇴했다. 발달장애 동생과 함께 지내면서 장애인 문제 등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화제가 되었고, YWCA 한국어 성지도자상 젊은지도자상, 한국장애인인권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동생은 내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라고 말을 꺼냈다. “2013년 동생이 17년 동안 몸담고 있던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보호자였던 저는 이 사건을 공론화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상당수 보호자들의 공론화 반대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고 아이들이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가족의 삶은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묻더군요. 장애인에게 평범한 삶과 인간다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순진한 행위로 취급됐죠.”

탈시설 이후 동생과 그저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장애인과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유튜브,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뤘지만 여전히 한계를 느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 입문 권유를 받아 정의당에 입당, 비례대표 2번으로 선출되어 제21대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제헌국회 이래 72년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 지원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

는 국회 기자회견장의 수어통역 전면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장혜영 의원의 노력이 있었다. 또 그가 줄곧 외쳐온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로 현충원 참배소에는 휠체어로 통행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됐다. 장혜영 의원이 국회 입성 후 가장 먼저 발의한 1호 법안도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이었다. 법안은 최종증장애인의 삶을 하루 24시간 온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대판 고려장으로 불렸던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처음엔 그저 ‘동생이랑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 목소리를 냈는데, 이제는 장애인, 사회적 약자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저도 장애인 가족이 아니었으면 눈앞에 펼쳐진 불평등을 평생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지요. 훗날 ‘이런 정치인이 있어 좋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꿈을 그려봅니다. 언젠가는 장애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요.” 🍵

“추경호 의원을 칭찬합니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광역시 달성군)과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사안이든 경중을 따지지 않고 경청해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도 활동 중이신데 장애인, 청년, 여성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장서서 예산에 반영해주시려고 해요. 그 모습에 ‘이 분은 진심이구나’ 느껴져요. 비록 정치적 이념과 신념, 지향하는 방향이 다를지라도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세요.”

글 윤성혜 사진 임진완

정본청원(正本淸源),
정도정행(正道正行)

바른 근본 위에서 바른길을 가는 삶의 원칙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금오공대 교수, 창업진흥원 이사장, 금오공대 총장을 역임한 후 제21대국회에 입성한 김영식 의원의 좌우명은 ‘정본청원(正本淸源), 정도정행(正道正行)’이다.

“정본청원은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의미고, 정도정행은 바른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바른 근본 위에서 바른길을 가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정본청원, 정도정행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김영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우리나라 정치가 적폐청산 등 지나치게 과거에 매달려 미래를 못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총장 임기를 마친 후 ‘국가에 봉사하라’는 주변의 권유에 고민을 거듭하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영식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정통한 학자 출신이다. 또 2004년 금오공대 창업보육센터장을 시작으로 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 창업진흥원 이사장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전역에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 2014년에는 아시아창업보육협회장으로서 아시아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들의 창업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대학 안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예비 창업자들이 중소기업청과 대학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꿈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입주업체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창업은 바로 일자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 창업보육센터장을 맡아 중소기업청을 드나들며 지원을 요청할 때는 ‘교수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예비 창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에 큰 자극을 받았습다. 덕분에 저도 신나게 일할 수 있었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과학기술 통해 기술강국 이룩하는 데 일조하고 싶어”

김영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출도시이자 산업도시로 이름이 높았던 곳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5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대기업들의 생산시스템 이전에 따른 경기 악화와 가동률 하락, 고용 감소,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구미산단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개발과 육성, 맞춤형 인재양성이 시급합니다. 창업지원 전문가로서 쌓아온 경험을 살려 산단 대개조, 강소기업 육성,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R&D지원을 이끌어내 구미가 자생력을 가진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식 의원은 과학기술을 통해 기술강국·선진강국을 이룩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최근 ‘미래산업발전촉진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래산업발전촉진기본법’은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 환경변화와 연구개발 규모 확대, 연구성과 복잡·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자가 보다 자율적,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수많은 연구성과와 연구개발의 노하우가 축적돼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 및 경제, 안보에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합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과 예산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R&D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4차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가 미래 어젠다의 틀을 짜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산업도시 구미가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김지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 펼칠 것”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자영업자 정책 전문가인 이동주 의원은 국회 입성 전 치킨집 사장이었다. 치킨집 운영을 계기로 상인 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그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에서 일하다 상인들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에 입성했다. 민생과 소상공인, 일자리 정책에 관심이 많은 이동주 의원의 인생과 정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동주 의원은 유년시절에 대해 장사를 하는 부모님 때문에 전학을 많이 다녔다고 회상했다.

“그러다 초등 5학년 때 선생님이 방과 후 같이 놀아주고, 책도 봐주면서 저를 부모님처럼 돌봐주셨어요. 그때 ‘이렇게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싶어 교사를 꿈꾸기도 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돌봄 노동’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시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전문적으로 사회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변호사를 꿈꾸면서 인천대 법

학과에 입학했다. 지금은 인천대가 국립대지만 당시는 백인엽, 백선엽 장군 형제가 운영하던 선인재단 소속의 사립대였다. 대학 3학년 때 학생회 간부를 맡으며 학생운동을 시작한 그는 재단의 전횡이 많았던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인천 시민들과도 함께 싸웠다고 했다.

학내 민주화 운동과 함께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에도 참여했다. 야간시위 도중 경찰이 쏜 다연발 최루탄에 오른쪽 눈을 맞는 부상을 입고 구속된 그는 2년 동안 수형생활을 하며 눈을 치료했지만 실명되고 말았다. 그의 오른쪽 눈은 의안이다. 이 의원은 "이제껏 신념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잘나가던 치킨집, 인근 대기업 부도로 접어

1997년 출소 후 "이전과 달리 교통카드로 버스를 타는 것이 낫설고 신기했다"는 이 의원은 낮에는 시민단체에서,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다. 을지로 인쇄소, 분식집, 구두세탁소 등에서 일하다 지난 2000년 인천 부평 지역에 치킨호프집을 열었다.

"동네 주민들을 상대하는 10평 내외의 작은 치킨호프집이었는데 2002년 한일월드컵으로 대박이 났어요. 매출이 평소의 5배였지요. 주문배달이 엄청나게 들어와 그때 번 돈으로 1~2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2004~5년쯤 동네 상권에 변화가 생겼다. 2001년 부평에 있던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1천400여 명이 정리해고되면서,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해고와 맞서 싸우는 한편, 동네에 치킨집, 술집을 차렸고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들도 문을 열었다. 치킨집은 과다경쟁이 됐고 인근의 또다른 회사들이 문을 닫으면서 부평의 골목상권 경기는 싸늘하게 식었다.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그는

2006년 가게를 접어야 했다. 이 의원은 치킨집을 정리하면서 자영업자의 성패는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 사회 구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를 계기로 상인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국유통상인연합회를 조직해 카드 수수료,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문제들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국회 입성 전 10년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섰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중소기업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2008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면서 함께 일을 시작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손실보상법', '임대로 멈춤법' 처리하고자

제21대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그는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대형 유통업체나 기업형 슈퍼마켓만 포함돼 있는 영업시간 제한·의무 휴업일 지정 대상을 복합쇼핑몰과 면세점, 아웃렛, 백화점 등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임대로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상인들을 위해 국회에 들어온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법'과 '임대로 멈춤법'을 꼭 처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의 민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사법·언론·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심이 요구하는 민생과제를 더욱 챙기겠습니다." ☺

글 고영선 사진 김지범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사의 분리 실시를 제안한다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대덕구

5월 30일이면 국회에 들어온 지 1년이 된다. 지난 1년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입법과 예산안심사,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험했다. 특히 정기국회 기간에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의정사상 최초로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이 수여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국감 우수의원 2관왕에 선정되는 영광도 누릴 수 있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심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충실한 국정감사나 예산심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도 느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

하면,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기국회 전에 국감을 실시해야 하지만, 여야 합의로 매년 예외조항을 통해 정기회 기간에 국감을 실시해오고 있다. 마치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정상적인 것처럼 관례화된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사를 분리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정기회 기간에 국감과 예산안심사를 통합 운영하다 보니 심사 기간이 부족하고, 심사의 전문성과 집중력도 떨어진다. 또한 국감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본 의원이 소속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처음 질의 시간 7분, 보충질의 5분, 재보충질의 3분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30개 기관에 대한 지난 1년간 감사를 단 15분 만에 해치우게 된다. 다른 상임위도 사정이 비슷하다.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해 동료 초선 의원들에게 제21대 첫 정기국회를 마친 소감을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시간 부족으로 인한 졸속 감사를 언급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국감과 예산안심사의 분리 실시에 적극 찬성했다.

국감뿐만 아니라 예산안심사도 문제가 심각하다. 국회가 555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은 채 석 달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개별 사업에 대한 꼼꼼한 심사나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보다는 예산의 감액 또는 증액 위주로 진행된다. 특히 예결위 종합심사와 상임위 예비심사가 동시에 진행돼, 상임위 예비심사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충실한 예산심사와 예산통제를 위해서도 국감과 예산안심사의 분리 실시가 필요하다.

국감과 예산안심사 분리는 '준법국회'를 지향하는 일

제21대국회 개원 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 '2021년도 국회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그 방향은 내실 있는 상시국회체제 운영으로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특히 6월에 국감을 실시해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준법국회'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6월 국감은 실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감과 예산안심사의 분리 실시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경제계나 시민사회의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니다. 우리 국회 스스로가 결단하고 여야가 합의만 하면 된다. 시기적으로도 올해가 적기라고 생각한다.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데, 올 6월에 국감을 치

르고 훌가분하게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국감과 예산안심사의 분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준법국회를 지향하는 일이다. 전체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일괄실시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본 의원이 소속된 국토교통위가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있다. 국토교통위의 성과를 봐서 내년에 전체 상임위로 확대하면 될 것이다. 만약 6월 국감이 어렵다면, 국감과 예산안 심사 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예산안심사는 예결위 본심사와 상임위 예비심사가 동시에 진행돼, 상임위 예비심사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점은 앞서서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10월에 실시하는 국감을 9월로 앞당기고, 예결위심사 전에 상임위 심사를 마친다면 예산안 심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불파불립(不破不立)이요, 선기후인(先己後人)이라고 했다. 낡은 것을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수립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하는 국회, 준법국회는 구호가 아니라 결단하고 실천해야 가능하다. 국감과 예산안심사 분리는 국회의 주인인 국회의원 스스로가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사를 분리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께서 결단해주시기를 호소 드린다. 🍵

발전공기업,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탄소중립시대,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미래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 1일 ‘탄소중립 시대,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국내 발전 공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고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전공기업들의 노력과 변화,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탄소중립은 OECD 37개국 중 32개 국가, G20 국가 중 12개 국가가 선언할 만큼 전 세계적 추세로 자리매김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본부장은 “탄소중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세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효율·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현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원 구성의 변화와 더불어 에너지 소비, 공급, 전달체계 등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와 ‘공정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발전공기업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석탄발전 상한제 등에 따라 기존설비 폐지 및 연료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면서 전환을 추진하는 공정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함과 동시에, 독일의 사례처럼 석탄발전사, 소속 노동자, 입지 지역 모두에 대해 보상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6개 발전공기업의 현황과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과 노력, 정책 목표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발전사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신기술 활성화, 적극적인 투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상한제 등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발전사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탄소전원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전원에 대한 정책 지원, 고용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제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학영 의원은 “탄소감축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과제가 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던 발전공기업의 역할도 변화에 직면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은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전기산업 본연의 역할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가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사업의 질서 있는 퇴진을 준비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 세미나

김병욱·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대식·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4월 8일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역 후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대군인’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 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말한다.

세미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영역 확대를 통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으며 ‘장병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법제화’ 등의 사안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루어졌다.

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는 “군가산점제도가 1999년에 폐지된 이후 군 복무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온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주도해 군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역 예정인 현역군인, 전역 이후 취업준비생

에 대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제대군인 고용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제대군인의 역량이 축적되어 산업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군과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난 1997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된 이래 교육·의료지원, 주택공급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성과가 미진하다”면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방향과 전략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군 직업 및 직업군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과 직업군인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홍보체제 구축과 재능기부, 봉사와 같은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제대군인의 우수성이 발현되는 플랫폼 제공 등을 제안했다.

김병욱 의원은 “제대군인에게 최대의 복지는 취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실한 군 복무의 결과가 제대 후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장병들은 군대가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강요하는 곳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식 의원은 “제대군인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사회 전반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지만 군에서의 경력 및 환경이 사회와 연계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제대군인에게 다양한 방법과 대안

을 통해 일자리를 보장해줌으로써 군 복무가 사회 진출을 대비하는 생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전역 후에도 ‘취약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외길 인생의 제대군인들이 그간의 삶을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 유통관리 시스템 긴급 점검 정책토론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 9일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 유통관리 시스템 긴급 점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기기 표준코드(Unique Device Identification: UDI)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제도 정착을 위해서 의료기기 제조·유통·사용 환경을 반영한 제도 보완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UDI제도는 의료기기의 제조부터 판매, 폐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개별 제품에 관련 정보를 망라해 담은 고유 코드를 부착하고 보고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지난 2019년 7월 4등급 의료기기 제품을 시작으로 올 7월 2등급 제품으로까지 확대 시

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제조사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의료기기 구매대행 업체(간납사)가 의료기기 보고의무를 전가하거나 소분판매를 요구해 UDI 도입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먼저 UDI 제도 확대 도입 시 의료적 특수 상황에 맞는 제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서는 환자 상태, 특성 등을 예상하고 기기를 구매해야 한다. 환자마다 체질, 신장 등이 다르고, 응급수술시 이는 시시각각 바뀐다”면서 “예외적 상황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제품 자체의 불량이나 문제가 개봉 순간에 발생할 수도 있다. UDI 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이런 다양한 의료적 특수 상황에 맞는 제도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UDI 도입 시 환자안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해, 환자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의료기기 전 주기 추적에 있어 환자 관점은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 따로 사용 보고를 안하는 것으로 안다. 부작용 등 관련해 사후적 신고는 하겠지만, 예방 측면에서 실제 사용현황을 보고하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은 “가장 먼저 제도 안착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정부는 의료기기 안전사용과 합리적 관리를 구현하고자 법령 제정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합리적인지 고민하고,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의료기기 표준코드 제도 확대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확인된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 개선 작업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계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만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의료기기 표준코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동시에 제도를 시행하는 의료기기 산업계가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는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국회 토론회

김상희·이수진(비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 14일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방송국 보도국의 프리랜서 작가에 대한 ‘노동자성’을 최초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판정에 국회와 법조계, 방송계 등이 모여 판정 이후의 조치와 나아갈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중노위는 방송작가 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 지노위)의 ‘각하’ 판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방송작가 최초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다. 앞서 두 방송작가는 계약기간을 6개월을 남겨둔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는 “이번 중노위 판정의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과 노동위원회 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리마저 회피해온 관행에 대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직종과 무관하게 방송업 종사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종의 특수성이 존재하며, 그것이야말로 노동자성 인정의 가장 강력한 징표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들에게도 이번 판정의 판단 근거들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방송사 비정규직 고용 문제와 관련해 “방송사는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프리랜서가 절대 다수인 곳”이라며 “방송 산업에서 지극히 불안정한 노동 위치에서 방송 제작과 지원과 같은 노동이 오랫동안 비가시적 영역으로 취급받고 경제적 보상으로부터 배제된 채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문제 해결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는 단순 처우개선이 아닌 조직 내 성차별

적 고용구조와 소득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젠더 평등한 방송산업의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방송 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은 “이번 중노위 심문 때 사전에 양해를 구해 방청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번 중노위 판정결과를 꼼꼼히 검토해서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작년 방송사 재허가 조건에 비정규직 인력 현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붙였다”며 “앞으로 직군, 직무 등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이 같은 자료를 매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방송 현장의 수많은 ‘위장된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방송 제작 현장을 꼼꼼히 근로감독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뿌리 깊은 방송계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언어재활사 의무 배치를 위한 공청회

허종식·강선우·최혜영(더불어민주당)·이종성(국

민의힘)·류호정(정의당) 의원은 4월 12일 ‘학교언어재활사 의무 배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언어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 학교의 적절한 지원과 교육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어려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언어재활사의 학교 의무 배치 제도를 마련하고자 열렸다.

언어재활사협회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 중 의사소통이 서투르거나, 학교에서의 언어기술 및 읽기, 쓰기 능력이 서투른 학생이 전체 학령 인구의 10% 정도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 중도입국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을 포함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생활은 대부분 말과 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어려움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이 본인의 어려움을 말로 호소하기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들도 그 문제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배치하기 시작했고, 1950년대 이후에는 공립학교 언어재활사 의무 배치 제도가 법제화됐다.

신명선 부산가톨릭대 언어청각치료학과 교수는 언어재활사의 학교환경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근거로 대상 학생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과 기초학습 능력의 향상을 위한 가정적, 사회적, 교육적, 제도적 차원에서 학교언어재활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언어재활사가 대상 학생의 의사

소통능력 및 기초학습을 전문적으로 선별 및 진단하고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중재를 실시하는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에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은경 언어재활사협회 회장은 “난독증, 느린 학습자, 학습지연 등의 학업 문제, 왕따, 학교폭력과 같은 사회성 문제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학교에서의 많은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에서 초래되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때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 학생들에게 초래될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최근 ‘코로나 학습격차’가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지역인재선발 확대방안 토론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광주·전남 지역인재선발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수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의 산업과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 지역대학 혁신 방안 및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이지현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과장은 “대학 진학단계에서 유출을 막는 것이 지역 내 인재 확보

의 첫 번째 단계”라면서 “올해 2월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약 및 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사항으로 강화되고 선발요건도 촘촘해지는 등 제도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하반기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서 지역인재 선발 요건과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라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역인재가 지역 내에서 진학-취·창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영 광주광역시교육청 진학팀 장학관은 “지역인재선발을 규정하는 현행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지역의 범위를 대학 소재 권역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역을 세분화할 수 없고, 지원자격을 고교유형별로 구분해 제한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 시 지역인재선발의 모집 비율을 60%까지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운태 조선대 입학처장은 ‘조선대 의료계열 지역인재선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자치단체에는 지역기업과 연계한 지역인재의 취업률 증가 방안 모색을 제안했고, 교육부에는 지역인재를 증대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고, 수도권 대학과는 다른 지방대학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입시전형과 평가척도 개선을 요청했다.

윤영덕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의·약·간호계열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선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당면한

지방대 위기를 단번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여 중앙과 지방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편평하게 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향후 지역대학 체질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고자 한다”며 “이번 토론회로 지역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수진(비례)·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연구해 동일한 유형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장철민 의원은 “반복적인 재해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면서 “오늘 토론회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변화시킬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토론회는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와 반복적으로 발

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토록 하는 것이 먼저 논의됐다.

이수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심층적이고 제대로 된 양질의 데이터 구축과 공개가 그 출발점”이라며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재해 발생 사업장을 방문·작성한 중대재해보고서를 일정 요건을 갖춰 공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산재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재해 원인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정보가 절실하다”며 “재해 원인이 공개돼야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라며 “공표할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 대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공표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13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가차원·사업장별 안전보건 정보포털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창현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은 “사업장 유해위험정보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는 생명

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헌법상의 배타적 권리이며, 기업의 영업비밀보장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주체와 공개에 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중대재해 보고서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선결과제’와 ‘중대 재해 조사 보고서 작성과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망 사고 시 무관용 원칙은 재해 예방에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혁면 연세대 산학협력단 연구교수는 “안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스웨덴의 경우 1년에 산업재해로 40명이 사망하는데 지금도 산업안전 보건 정책의 첫 번째가 사망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 조사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됐다. 산재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포털’ 구축 후 중대재해 통계와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논의됐다. 이같은 논의 방향에 대해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불과 몇 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했다. 🍵

정리 윤성혜



공직자 부패행위 사전 예방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등 안건 50건 의결

국회는 4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 47건, 규칙안 1건,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하정구) 추천안 등 총 5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공직자 190만 명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및 ‘국회법 개정안’과 가맹사업 시장 질서를 위해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마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재난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법’ 등이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에 관한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 개정됐지만, 행정부와 같은 독립제 조직을 전제로 마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합의제 조직인 국회에 곧바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안은 사적인 이해관계를 사전에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의원 당선인은 당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내용,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 및 부동산 보유 현황, 의원 본인의 민간업무 활동 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등록사항 중 본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등록 또는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장, 해당 의원,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이해충돌과 관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위원

회 위원 선임을 요청하고, 의장이 선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원이 안전심사 등과 관련해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안전 등에 대해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마지막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소속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 위원 선임 단계부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위원회를 배정할 수 있게 됐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없는 내용),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신청’ 제도로 위원회 안전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국회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법’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제도를 적용받게 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법률안은 유명 브랜드를 모방해 만든 부실한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개정됐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현황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수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

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 직영점이 1개 미만이거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등록신청을 공정위가 거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검증된 가맹본부 이외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불가능하게 해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부실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모집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무위원회)

법안은 최근 LH사태 등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해 공직자의 부패를 예방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제정됐다. 대다수의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 행위를 사후적으로 제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감안, 공직자가 공적 의무에 비해 사적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 것이다.

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신고 규정을 신설했다.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이를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부동산을 직접 다루고 있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시에 이를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직

무관련자와 특정 유형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해야 하고, 민간부문에서 고위공직자로 임용시 민간부문의 3년간 활동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퇴직공직자와 특정 유형의 사적 접촉시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로 인한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고위공직자등은 소속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에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 고위공직자등은 소속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고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더불어 신고 규정 및 행위 제한 규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 형사벌, 과태료의 제재 규정을 도입했다.

이번 제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해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정무위원회)

현재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몰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보다 더 강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 동영상 사이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계좌대여 알선·중개 행위가 이뤄져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제정됐다.

법률은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 뿐 아니라 시드머니까지 필요적 몰수 대상으로 하고, 불법 계좌대여 알선·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했다. 그밖에 현재 투자회사형 펀드에만 적용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의무를 모든 형태의 펀드로 확대하고, 기존 증권사의 업무 추가 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추가등록제를 도입했다.

이번 제정으로 시세조종행위, 불법 계좌대여 알선·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펀드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정무위원회)

법률은 2021년 이후 서민 신용보증상품 공급을 위한 신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출연금 부과대상을 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全)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고, 현재 재원별로 구분돼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구조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번 제정으로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재원 운용의 효율성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계 내에서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영화 근로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근로를 강요하는 등 성희롱·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미투운동’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 이를 방지하고자 개정됐다.

개정안은 영화제작업자가 영화 촬영 전 성폭력 예방교육 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영화진흥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 등이 영화계 내의 성폭력 및 부당한 근로환경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은 문학관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문학관 협력망 구축, 문학관에 대한 재산 기부·문학관 자료의 양여 등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

됐다.

개정안은 문학의 정의를 확대해, “사상이나 감정”에 한정하지 않고 이야기, 가치, 교훈 등을 언어로 표현한 작품도 문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조’와 ‘아동문학’을 문학의 종류를 명시하는 예시에 포함했다. 이외 문학관 협력망 구축, 문학관에 대한 재산의 기부 및 문학관 자료 양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문학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다양한 장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학관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문학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문학관·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간의 자료 공유를 통해 문학관 운영의 내실화와 국민의 문화향유권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의 내용이 불분명해 해석의 논란이 있고, 반출 기간 연장의 근거가 없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촬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문화재 국외 전시에 대한 탄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수리에 관한 규정이 건조물 문화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동산문화재의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문화재의 ‘보존처리’에 관한 개념을 도입해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승인과 보존처리 시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동산문화재의 차별성·특수성을 반영해 동산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체계적인 문화재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은 야생동물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해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 중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는 야생동물이 다수 있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개

정됐다.

개정안은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제도를 신설했다. 야생동물검역기관 및 야생동물검역관 등을 두어 지정검역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수입검역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처벌수위를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살생물제품 안전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이 사용하는 살생물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물질들이 사용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제도를 마련했다.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원인자가 무자력이거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정부 재원과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살생물제품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인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상향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은 끊임없는 서비스 제공으로 감염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의료·돌봄·대중교통 종사자, 취약한 근무환경으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높은 이륜 배달차·환경미화원, 인력부족과 불명확한 업무범위 등으로 상시적으로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택배기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률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으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후 원직장으로의 복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없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에 장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재해 발생 당시의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



단은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해근로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고, 요양기간 중에 직업능력의 유지·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만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으로 인해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고 저출산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거나, 국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가 제한돼 있어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초기 자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30, 40대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률안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거나 국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를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함께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을 보다 원활하게 건설·공급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리 김영선

국회 ART GALLERY 5월 작품전

‘봄바람 부는 봄날’

2021. 5. 4. - 5. 28.



- 장소 국회의원화관 1층 아트갤러리
- 전시품 〈봄바람 부는 봄날〉 등 회화 14점
- 작가 성영록
- 추천 최강욱 의원실
- 문의 국회사무처 문화소통담당관실 02-6788-2063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국회는 지난 3월 24일 본회의에서 6·25전쟁 전후에 비정규군으로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표하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6·25전쟁 전후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군번과 계급도 없이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원으로 6·25전쟁 종전까지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 남·북도 등 작전지역에서 약 30개의 단위부대로 편성되어 미8군 및 미국동군사령부와 연계해 유격작전을 전개했다. 이들은 북한지역 연안 일대와 적지 내륙에서 해안선침투 상륙작전, 공산군배후 습격, 교량·교통망 파괴, 공수특전 침투 등의 전투 활동을 통해 함경도와 평안도 연안에 2개 군단, 북강원도와 함경도 연안에 1개 군단 등 공산군 3개 군단을 견제하는 전략적 효과를 거두었고, 남포항과 원산항의 입구를 봉쇄하는 등 동·서해 제해권 확보에도 크게 기여했다.



배용근 수석전문위원
국방위원회

힘난했던 입법과정

하지만 정부는 미군 등 외국군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 인정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의 희생 및 공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난 올해 초까지도 이어져 왔다.

지난 2007년 3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군 소속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



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¹⁾한 이래, 국회에서는 제17대국회부터 꾸준히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노력이 있어 왔으나, 정부에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해 입법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제21대국회 국방위원회는 6·25전쟁 전후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국가 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로,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더 늦기 전에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본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그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법률안의 제정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던 정부 측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제정법의 주요 내용

본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정법의 적용대상을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미국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일명 켈로부대)나 미군 8240부대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인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에 소속되어 활동한 인원으로 규정했다.

둘째, 제정법은 공로자 또는 유족에 대해 보상금 대신 공

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보상을 위해서는 개인별 활동기간 및 공적 등에 대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나, 비정규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의 신분 및 계층(연령·성별·나이 등)이 외국군 소속 첩보부대원, 유격대원, 학도의용군, 향토방위대원, 국민방위군 등 매우 다양하고, 전쟁 상황 속에서 정규군이 아니었던 까닭에 그 근거자료가 부족하며, 정전 후 6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6·25참전 비정규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 확대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6·25전쟁 전후 외국군 소속으로 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등 약 1만9천 명(국방부 추산)이 예우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친 이후 공로자로 인정된 분들이나 그 유족들이 최종 예우 대상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빠짐없이 찾아내 기리고 이들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나가려는 국회의 노력이 계속될 것을 기대해본다. 🏠

1) “외국군 소속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권고” 주문(2007.3.1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주한연락처(KLO: Korea Liaison Office)를 포함해 외국군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들에 대해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프랑스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입법 동향



김정연

국회 프랑스 주재관

2020년 6월 21일 기후에 관한 시민회의¹⁾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149개의 제안을 프랑스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12월, 에마뉼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 제안을 수용²⁾해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 개정 및 관련 법안 마련 계획을 발표한 후, 1월 20일과 2월 10일 각각 개헌안과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능력(기후 탄력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하 ‘기후법안’이라 한다)을 하원에 제출했다. 마크롱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입법을 추진하는 데에는 사실상 정치적 배경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지방선거와 상원의원 선거에서 선전한 녹색당(EELV)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환경’ 이슈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경이 어떻든 기후변화 문제는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 이슈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헌법개정안과 기후법안의 주요내용

먼저,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정안은 프랑스 공화국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조에 ‘생물다양성 보존 및 기후변화 대응 보장’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3월 16일 하원에서 1차 가결됐고, 상원에서는 5월에 심사될 예정이다.

기후법안은 3월 29일부터 하원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 1) 마크롱 대통령 주도로 2019년 10월 창설된 기후변화 관련 독립 자문기구로, 무작위로 선정된 프랑스 시민 150명으로 구성
- 2) 149개의 제안 중 146개 제안이 채택되었는데, 지난 2월 28일 ‘르몽드’지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75개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71개의 조치 중 40여 개가 기후법안을 통해 반영

약 7천300개의 수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6개 분야(①소비 ②생산 및 근로 ③교통 ④주거 ⑤식품 ⑥환경관련 법적 제재 강화)에서의 저탄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소비 분야의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탄소사용 기록을 점수화해 상품·서비스에 표기하는 탄소점수제를 최대 5년간 시범 실시 후 도입하고 화석연료의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생산 및 근로 관련해서는, 기업활동의 친환경 전환 지원, 노사대화에 기업활동의 환경에 대한 영향 고려를 의제로 도입, 재생에너지 생산시스템 신설 의무의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주민 1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 내에 2025년까지 저탄소배출지역 설정의 의무화, 2030년부터 특정 자동차(탄소배출량 123g/km) 판매 금지, 지방정부에 중량 화물차에 대한 도로 환경세 신설 권한 부여, 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선 항공노선 운항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2028년부터 열효율이 낮은 주택 임대 금지 및 매도시 필수적 에너지 감사 실시, 2030년까지 토양 인위화를 지난 10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 토양 인위화를 유발하는 신규상가 건설 및 확대공사 금지, 국토의 30% 자연보호구역 설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 관련해서는 민간 케이터링 업체에 지속가능한 제품 50%, 유기농 제품 20% 사용 의무화 및 질소 비료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환경관련 법적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생태계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고의적 환경파괴 행위를 '생태계 학살'

범죄로 규정해 최대 10년 금고형 및 450만 유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기후에 관한 시민회의 측은 여러 경제단체들의 로비에 의해 당초 제안한 조치들이 축소되거나 연기됐다고 실망감을 표명하며, 2월 28일 열린 화상회의에서 기후법안을 10점 만점에 2.5점으로 평가했다. 환경 단체 및 전문가들 역시 법안이 당초 취지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했으며, 지구온난화 대응 정책 관련 독립자문기구인 '기후를 위한 고등위원회(Haut Conseil pour le climat)'는 2월 23일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기후법안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게다가 기후법안에 대한 하원 심사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에는 프랑스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모인 180건 이상의 반대시위³⁾도 열렸다.

향후 동 법안들이 의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극좌파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당'을 비롯하여 녹색당 의원들은 정부법안이 기후변화 위협의 위급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며, 우파인 공화당은 기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 우려로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이지만, 환경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 등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논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또한 헌법개정은 헌법 제89조에 따라 양원 표결 후 국민투표 실시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지방선거도 연기된 상황에서 금년 중 조기에 국민투표 실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3) 주최측에 따르면 11만 명,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4만4천 명 참여

700만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2.5.]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보호 등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형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는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에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월 9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상공인 관련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7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본법 하나 없었다”면서 “기본법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 통과 직후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이라며 크게 환영했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측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을 총괄하면서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서 소상공인 성장, 보호,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했다. 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중기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위원장 포함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부처의 소상공인 정책 총괄,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위원회의 안전 협의 지원을 위한 ‘실무조정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



서울의 한 지하상가 모습. '폐업정리'를 알리는 종이가 붙어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한 '전문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 5월 중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범위 넓어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

또, '소상공인기본법'은 고용, 매출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넓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를 도입했다. 업종별 10억~120억 이하, 상시 근로자수 5인 또는 10인 미만 기준을 넘어서도 3년간은 관련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단,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예외로 뒀다. 차남수 본부장은 “이제 막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 밖에도 기본법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보호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차남수 본부장은 “정부가 시장상황 경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 정부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됐지만 후속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차남수 본부장은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 등 후속입법도 논의됐으면 한다”며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체력이 약해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입법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 박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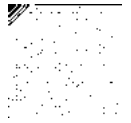
학생연구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2021-02-25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2021-03-24 본회의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국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긴급 현안질의 등 실시

교육위,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 방문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4월 1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서울 관악구 당곡고를 방문,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당국 및 학생·학부모로부터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위 위원 7명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참석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본인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각자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맞춤형·자기주도형 교육을 실현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2018년부터 연구학교·선도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당곡고도 이 가운데 한 곳이다.

이날 위원들은 당곡고, 영등포고, 수도여고, 신림고 등 4개교가 실시간으로 동시에 참여하는 공동교육 수업을 참관한 뒤, 고교학점제에 대한 재학생·졸업생·학부모·교사 등의 경험을 공유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유기홍 위원장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참석인원 최소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과 점검 결과는 향후 교육위의 의정활동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외교통일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의 4월 2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당 위원들은 부적절한 태도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 정서나 요구와 매우 다르고,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은 “여당 의원이지만 야당같이 질의하겠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전제로 사실상 무기력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한 부분만 잘라서 보도를 했다. 국내 언론이 헤드라인을 뽑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은 적극적인 ‘백신 외교’를 주문했다. 정진석 의원은 “작년부터 전문가들은 ‘닥치고 백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정부는 경청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백신 빈곤국,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진 위원도 “세계가 지금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는 보건복지부에만 맡겨놓느냐”며 “외교력을 총동원해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아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은 “경제력 10위 국가가 정부 대응 잘못으로 세계 꼴찌의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4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법률안은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이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상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천연기념물·명승을 비롯한 자연유산을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사회의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최근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자연유산을 더 효과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규 서울대 교수는 최근에는 세계유산 등재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문화경관'과 같이 복합유산으로 등재하는 추세로, 자연유산을 활용해 국민이 향유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은 제정안의 많은 내용이 현행 '문화재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고,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에서 유사 법률에 근거한 생물의 보전 조사·연구, 증식·복원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 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정안 심사시 입법의 정책적·경제적 측면과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자연유산의 정의와 범위 △국립자연유산원의 기능 및 위치 △다른 부처와의 업무 중복 우려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질타

4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의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부처 합동TF' 보고서가 쟁점이 됐다. 지난해 10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정필모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원안위가 명확히 국민들에게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비공식 문건이 흘러나오면 국민은 헛갈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염재식 원안위원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은 것은 맞다"라며면서도 "방류가 국제적 원칙에 따라 추진됐는지 강한 의문이 있고,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보승희 위원(국민의힘)은 "전문가 의견을 실컷 듣고 나서는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나"고 지적했다.

염 위원장은 "전문가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본의 방류 결정이 (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또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김영식 위원(국민의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삼척동자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고, 한준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원안위는 해설가 역할만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등 논의

4월 2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쟁점이 됐다.

박상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이나 충북에서는 KTX가 도심을 지나지 않는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김포와 수도권 서부지역은 서울 연결선이 배제돼 주민의 원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위 차원에서 별도의 현안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은 정정순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과 관련해 국회에서 정식보고를 하고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재조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지 국토교통부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 직무대행은 “다만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대해 공청회에 들어갈 때 경제적인 효율성과 타당성, 교통편의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3가지 원칙하에 재원조달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뽑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성원 장관 직무대행은 정동만 위원(국민의힘)이 공시가격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공시 관련법에 공시가격은 적정가격, 즉 시장 거래 가격을 반영하도록 돼 있으며 인위적으로 동결하거나 조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부동산 세율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관계부처 간에도 이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LH 사장으로 취임한 김현준 사장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일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사장은 “LH를 새로운 조직으로 개혁하고 혁신하겠다. 청렴과 공정을 최우선으로 조직을 강력히 쇄신하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확실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는 “2·4대채 등 정부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 안정 달성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

정리 박민선

NEWS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 위촉



박병석 국회의장은 4월 14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특검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하며 그 중 3명은 당연직, 4명은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에서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상 당연직), 김남준 변호사, 최정학 방송통신대 교수(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구충서 변호사,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이상 국민의힘 추천)로 총 7명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후보추천위원들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훌륭한 특검을 추천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안전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위는 4월 22일 특별검사 후보로 이현주·장성근 변호사를 추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이현주 변호사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임시의정원처럼 국민 마음 다시 하나로 모아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10일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기념일을 맞아 기념사를 발표했다.

박 의장은 기념사에서 “임시의정원 개원과 임시헌장 제정으로 우리 겨레는 반만년 민족사에 다시 없던 역사 대전환의 순간을 맞이했다”면서 “3·1운동을 임시의정원과 임시헌장, 임시정부로 모아낸 것처럼 국민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내는 또 한 번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장은 “임시의정원이 3·1 만세운동으로 표출된 겨레의 한결같은 마음을 임시헌장에 충실히 담아냈다”며 “2021년, 대한민국 국회가 표상으로 삼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영 대결과 격차 확대를 언급하며 ‘국민 모두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결국 개헌”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 개헌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임시의정원 개원 기념식은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103주년 기념식은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박물관 재개관식과 병행 개최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국회박물관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 등을 통해 매년 임시의정원 개원을 축하하고 그 설립 취지와 활동성과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특히 5년 주기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개원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사무처는 임시의정원 개원 기념일을 포함한 각종 기념일을 지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향후 국회가 주최하는 각종 기념행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김일윤 신임 헌정회장 예방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3월 29일 국회의장집무실에서 김일윤 신임 헌정회장의 예방을 받고 “헌정회가 경륜과 지혜의 샘터가 되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조언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민 갈등이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국가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권력의 분산을 전제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박 의장과 국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했었다”면서 “우리 모든 헌정회원들이 박 의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앞으로 헌정회 현안에도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헌정회 김충환 사무총장과 이군현 전 의원,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전상수 국회입법차장, 조용복 국회사무차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불기 2565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4월 29일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 불기 2565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축사에서 “일년 넘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한다. 부처님의 가피(加被: 자비를 베풀어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힘)가 아주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인연이 없더라도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무연대자(無緣大慈), 조화와 화합의 화쟁사상(和諍思想) 실천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밝히는 불빛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많은 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각회는 이날 점등식에서 미안마 민주화 기원금을 불교계에 전달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원행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수석부회장인 문덕 스님(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과 국회 정각회 회장인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명예회장인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부회장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회장 이현승 의원(국민의힘) 등 정각회 회원,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점등식에 앞서 박 의장은 국회 접견실에서 원행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 등과 차담회를 가졌다.

‘일 잘하는 국회’ 뒷받침하는 국회사무처 직제 의결

‘일 잘하는 국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 개정규칙안’이 4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NEWS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법률안 등 의안 발의건 수의 폭발적 증가와 상시국회 체제 운영 등에 따른 입법지원인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2022년 개관을 앞둔 국회부산도서관 및 국회박물관의 운영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제출된 55인 증원안에 대해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별 업무량과 순차증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안 대비 18인을 감원, 37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특히 증원된 37인 중 22인은 위원회(19인)와 법제실(3인)에서 의안 검토 및 심사 지원, 법률안 입안 등 국회 입법기능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제17대국회 이후 법률안 접수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전체회의 정례화와 법안소위 의무 개최를 확대하는 ‘일하는 국회법’ 시행으로 회의지원 업무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안의 내실있는 검토와 효율적인 상시국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인력 증원이다.

그 외 의사(議事)지원 및 행정지원 인력(15인)도 늘어나는 의사 일정에 대비하고, 디지털국회 추진과 정보보호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2022년 개관하는 국회부산도서관과 국회박물관 관리·운영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중요도와 우선 순위를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증원만을 반영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의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의 우려와 염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사무처는 이번 직제 개편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더 충실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회의 입법활동과 행정부 견제 기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 ‘책모아 도서 나눔’ 행사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국회의원과 국회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기증도서를 수집하는 ‘책모아 도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책모아 도서 나눔’은 책을 통해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2018년부터 이어오는 행사로, 국회도서관은 기증받은 도서를 중심으로 정보 및 문화소외지역의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곳에 매년 약 1만2천 권을 재기증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책과 지혜를 나누는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국회도서관은 앞으로도 ‘책모아 도서 나눔’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국회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도서관, 경남교육청과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은 4월 21일 경상남도교육청과 지식정보의 공유와 독서문화의 확산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상남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 초·중·고등학교 1천 여 곳은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3억 1천만 여권의 방대한 디지털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도 해당 기관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교육정책 수립 및 독서교육과 수업의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도서관은 학술정보의 공동 활용과 상호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02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발족 이후 본격적으로 전국 대학교,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4천 960개 기관(대학교서관 421개, 전문도서관 850개, 공공도서관 3천689개)과 협정을 맺어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시·도 교육청과의 협력에 집중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시작으로 17개 시·도 교육청과 모두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국회도서관 자료를 이용해서 꿈을 펼칠 수 있고, 더 손쉽게 정보에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회교육위원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국회도서관은 전국의 시·도 교육청과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와 효율적 공동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모가 작은 공공도서관뿐 아니라 작은도서관과도 협정을 체결해 전국 어디에서나 정보격차 없이 국회전자도서관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를 완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읽어주는 NABO 보고서’ 설명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국회의원, 의원보좌직원 및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 분야 의정자원을 강화하기 위해 2회에 걸쳐 ‘2021년도 읽어주는 NABO 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는 국회예산정책처 과장 및 분석관으로, 제1차 설명회는 ‘2021 대한민국 재정’,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를 대상으로 ‘국가재정의 이해’, ‘주요 재정제도’,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주제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제2차 설명회는 ‘2021 경제전망’,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 보고서를 대상으로, ‘2021년 국내 경제전망’, ‘합계출산율 시나리오별 인구추계’를 주제로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전신청을 받아 Webex를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들은 설명회의 내용과 난이도, 비대면 방식의 진행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

NEWS

처는 주요 보고서를 대상으로 '2021년도 읽어주는 NABO 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 '2021 경제전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외 경제여건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2021 경제전망'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1년 국내 경제전망을 제시하고 있



다. 1장에서는 세계경제성장률 및 국제무역,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제유가 등 세계경제 여건과 국내 경제성장률, 경기국면 등 국내 경제여건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각 부문별 2021년 전망을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신흥국 등 주요국에 대한 동향과 전망 등을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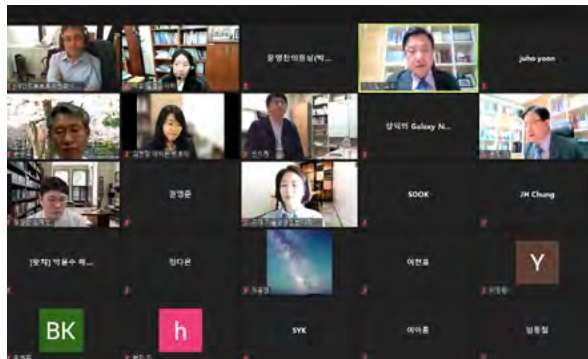
2021년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1% 성장할 전망이다. 수출은 서비스수출의 회복이 지연되었으나, 재화수출이 해외수요확대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수출호조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부문의 투자확대와 친환경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비IT부문의 신규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가계의 저축률 상승에 따른 소비여력 확대, 정부의 소비진작책 등으로 지난해의 부진

에서 벗어나겠으나, 가계의 고용 및 소득여건 개선이 미흡해 더딘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내외 경제는 백신보급과 각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는 비대면경제 활성화 등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장전략으로서 우리 경제의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기술 혁신 등을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 전문가 특별좌담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홍)는 지난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국민의힘 이영 의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 전문가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국회, 정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마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 번째 이슈로 가명정보에 대한 파기 의무 도입에 대해 손승우 중앙대 교수와 선지원 광운대 교수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줄인 데이터는 일정한 목적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가명정보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와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승인을 위해 가명정보 파기 의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이슈로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한 것에 대해 이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럽 GDPR과 같이 국외이전 방식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외이전을 받는 자의 제3국으로의 재이전에 대해서는 역외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 번째 이슈로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에 대해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전송요구권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송요구권 관련 법안들 간의 중복조항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네 번째 이슈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 권영준 서울대 교수는 다양한 위반 행위를 동일한 상한선 틀로 규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선지원 광운대 교수는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과징금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외에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개인정보 처리방침 심사,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바이든 행정부 동북아외교 기획시리즈’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바이든 행정부 동북아외교 기획시리즈’로, 세 편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바이든 행정부 동북아외교 기획시리즈’는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간 고위급 회담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한국의 대응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목표와 기조가 북한의 비핵화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바, 각 회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별도로 분석한 보고서로 구성됐다. 각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중 고위급 회담의 주요 내용과 한국의 대응과제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18~1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앵커리지에서 개최된 미·중 간 첫 고위급 회담의 주요내용과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미·중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통해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미·중 관계 전망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성급한 선택적 딜레마의 오류에 빠지기 보다는 국익 관점에서 일관된 외교적 원칙과 입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2.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년 3월 16일 도쿄에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가 개최됐

NEWS

다. 이번 회의에서 미일 양국은 △미일동맹 강화, △센카쿠제도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일·한미일 협력 추진,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미일 협력 강화 등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의 공동발표문에서 양국은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기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대중정책에 있어 일본 정부가 정경분리 방식의 균형유지를 취하고자 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한미일 협력요구가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존재한다.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 입장을 정립하고, 이에 근거해 한일·한미일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한미·미일 2+2회담, 미중 고위급 회담과 북한의 대응 및 시사점

바이든 행정부의 첫 동북아 외교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미국 외교의 복원시도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링컨 국무장관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수 주 내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최근 한미·미일 2+2회담과 미중 고위급 회담의 주요 내용에 대해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한편으론 대미 외교 및 군사적 대응을 펼치면서도 북미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북미대결의 지속보다 북미대화의 접점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15·16호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4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5호(표제: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



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와 제16호(표제: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를 발간했다.

제15호 저자인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상 주요 정책문제를 낮은 자율성에 따른 미래 정책 환경변화 적응 한계, 정권별 키워드 단절 현상 심화와 정책추진의 연속성 한계, 부처 및 조직 간 조정 한계에 따른 정책 간 정합성 확보 한계, 증거기반 정책결정 제약에 따른 계획 타당성 확보 한계, 백화점식 계획 추진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저하 등으로 도출했다.

이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요 10대 정책혁신과제로 국가 중장기 비전과 중장기계획 간 상호정합성 확보, 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부처 간 협력체계 및 협업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적 고려, 목표달성에 관여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통합적 고려, 정책학습효과 강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활용 다각화,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 기술적 요소들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 계획 내 목표·전략·과제 간 응집성 및 논리적 인과관계 강화,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하고 전략적 계획 수정 보장,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관련 법적 근거 및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제16호에서 이선화 연구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국가장기발전전략을 위한 개혁의제로 정책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발전전략 추진, 관료제의 역할 재정립, 분권형 의사결정 및 정부정책 전달체계의 구축,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 강화를 도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발전전략'을 위한 개혁의제로 정책의 관할권 조정과 부처 내 협업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관료제의 역할 재정립'에서는 총원제도와 승진제도로 나누어 고시제도 및 공채개혁, 민간개방형 직위제, 성과·역량 위주의 내부 승진시스템 구축 등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분권형 의사결정 및 정부정책 전달체계'에서는 주거 및 지역공동체, 보건의료, 고용보험, 노사관계 등 부문에서 중앙정부 주도형 모형을 탈피한 분권형 의사결정과 지역 중심 서비스 공급망 강화방안을 제시했으며 분권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거점도시와 주변 중소도시를 포함해 권역을 재설정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 강화'에서는 국회의 사회갈등 조정 역할 제도화와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국회와 재정 당국의 협업 시스템 구축을 개혁의제로 도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제1회 국회미래포럼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은 4월 22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국회미래포럼(지역소멸 위기와 대안:지방대학의 미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상임위원회(교육위,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 의원연구단체(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국민미래포럼, 국가재조포럼)와 공동주최로 열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존폐위기에 몰린 지방대학과 그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문제에 대해 "교육부 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고등교육 정책은 물론 지역혁신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미달사태가 속출하고 지역위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고려해 '미래 대안'을 중심으로 고등·평생 교육, 지역경제, 혁신, 균형발전, 삶의 질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접근해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대전대 법학과 김영진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소영 센터장이 각각 '지방대학의 위기:현황과 미래',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지방대학의 융복합 미래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김상미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이덕난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유빈 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제도 연구실장,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석중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참석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포럼에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지방대학, 균형발전, 인구구조, 교육정책, 직업교육, 지역혁신, 지역경제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국회미래연구원은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포럼 이후 후속방안에 대해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회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을 카메라로 중계합니다”



황육익 주무관
국회방송

Q 국회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셨는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아니지만 TV를 시청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나 특수효과 등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자연스럽게 방송촬영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대 제대 후 1994년 한 지상파 방송국에 입사하면서 보도국 사회부에서 영상취재를 했습니다. 여러 사건·사고를 취재했지만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근 한 달 동안 치참한 붕괴현장을 누비며 취재

했었지요. 당시 백화점 붕괴가 비리로 얼룩진 부실공사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국적인 건축물 안전실태 조사와 건축법 강화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남기는 일을 국회에서도 하고 싶어, 국회방송 개국 전인 1997년부터 국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Q 국회방송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주세요.

A 국회방송은 ‘국회법’ 제149조에 따라 운영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방송’으로, 국회의 활동과 정책현안, 입법정보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목표는 의회전문 채널로서의 위상 정립, 채널의 독자성 및 차별성 확보, 국회와 국민의 가교 역할, 교육적 기능 등이 있습니다. 국회방송은 사실에 입각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을 지킵니다. 국회방송에서는 국회 회기 중에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의 회의를 편집 없이 생중계하며, 비회기 중에는 입법

정보와 시사 프로그램, 정치·역사·문화 관련 교양 프로그램을 편성, 방송하고 있습니다.

Q 주무관님의 담당업무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A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청문회, 국정감사,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 등 국회에서 진행되는 주요 행사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사 및 보도, 입법정보, 문화·교양 프로그램 등 스튜디오에서 녹화하는 프로그램도 촬영합니다. 그 밖에도 의정종합뉴스, 뉴스N 및 뉴스945 영상아이템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고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촬영팀 업무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밀집 장소에서 촬영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개인 방역에 무척이나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확진자가 있는 자리에 노출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는 장시간 진행될 때가 많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 채 무거운 ENG 카메라를 들고 촬영할 때면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합니다. 특히 안경 쓴 분들은 김 서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촬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회방역대책 2단계 조치로, 국회의 모든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상취재팀은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 때문에 각 회의마다 지상파, 종편, 지방방송사 등과 촬영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그로 인해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그 밖에 국회방송에서 근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A 2016년 2월 23일 필리버스터 발동으로 무려 192시간 동안 생방송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KBS에서 이미 1983년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단일주제 연

속 생방송 최대 기록(기네스북 등재, 총 453시간 45분)을 갖고 있기에 필리버스터 생방송이 최장시간 연속 생방송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산가족’ 프로그램이 KBS 뉴스나 광고 등으로 중간중간 끊겼던 시간이 있었던 데 비해 국회방송의 필리버스터 중계는 광고 등 다른 프로그램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 연속 생방송이었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상황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생중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2016년 12월 6일부터 2017년 1월 9일까지 진행됐던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도 기억에 남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몰렸던 만큼 수많은 언론과 취재진이 서로 열띤 보도를 했고 국회방송의 생중계는 케이블TV 135개 채널 가운데 시청률 4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드론촬영을 통해 국회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기록하는 영상다큐 제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스테디캠과 수중촬영 등을 통해 더 전문화되고 안정화된 제작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방송제작과 중계 카메라팀이 지난 2018년 ‘중계방송제작이론’ 관련 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후배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특수촬영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고 싶습니다. 촬영실은 아날로그 형태로 보관돼 있는 각종 ENG영상자료(메타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ENG영상을 데이터화해 영상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글 박민선 사진 김진원

유목민들 사이 중국을 대표하게 된 탁발선비족의 북위(北魏)



과거 만주(滿洲)라고 불렀던 중국의 동북 지방, 즉 속칭 동북 3성 지역(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은 78만7천 km²의 면적으로 한반도 크기의 3배가 넘는 광활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유라시아 초원의 동쪽 끝 지점인 다싱안링, 우리말로 대흥안령(大興安嶺)으로 알려진 총길이 1천200km의 산맥과 만난다. 서남향으로 길게 뻗은 다싱안링산맥은 서쪽으로 초원지대, 동쪽으로 삼림지대를 나누는 경계선이다. 이곳은 예부터 풍부한 동물자원을 사냥하면서 생활하던 민족들이 세력을 규합해 국가를 만들고 중국 방면으로 진출하던 '제국의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었다. 거란의 요나라, 여진의 금나라 그리고 만주의 청나라는 모두 이곳에서 시작되어 나중에는 중국을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했다. 만주지역 출신으로 최초로 북중국을 통일한 탁발선비족과 그들의 국가 북위(北魏)에 대해 살펴본다.



북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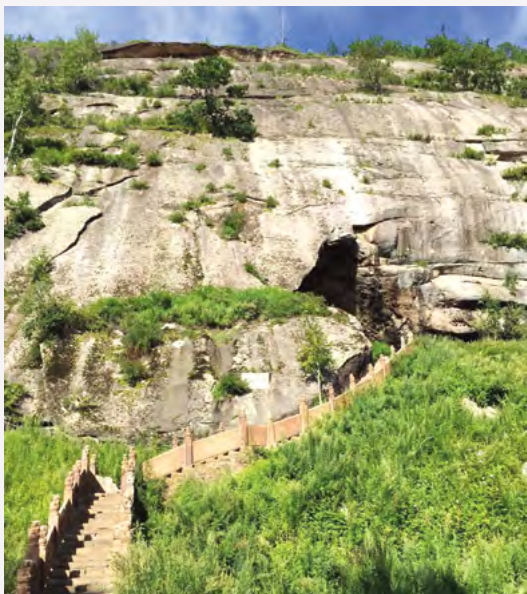
탁발선비족이 세운 북위는 '물란'의 나라

2020년 개봉된 영화 '물란'은 1998년 애니메이션 작품을 실사판으로 제작해 인기와 논란을 동시에 일으킨 화제작이었다. 영화의 주인공 '물란'의 중국식 본명은 '화목란(花木蘭)'이다. 주인공 화목란은 여성으로서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서 남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는 당찬 여인이다. 이 이야기는 사실 1912년에는 경극(京劇)으로, 1939년에는 영화로, 그리고 1940년에는 연극으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흥미로운 것은 디즈니 '물란'이나 중국판 영화나 연극에서나 화목란은 중국 한족(漢族)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화목란이 무찌른 적은 흉노(匈奴)나 돌궐(突厥)과 같은 중앙유라시아 유목민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사실 화목란의 나라는 탁발선비족이 세운 북위(北魏)였다. 화목란 이야기의 원전인 '목란사(木

蘭辭)' 혹은 '목란시(木蘭詩)'는 남북조 시대에 처음 등장한다. 남북조 시대라고 함은 황하(黃河) 유역의 북중국과 양자강(揚子江) 유역과 그 이남의 남중국에서 다른 국가가 각각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북위는 이른바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의 혼란 속에서도 북중국을 통일한 강국이었다. '목란사(木蘭辭)'에는 북쪽 변경의 흑산(黑山)이나 연산(燕山)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탁발선비족의 북위와 몽골 초원을 장악한 유연(柔然) 사이에 빈번하게 전쟁이 벌어진 곳이었다. 무엇보다 화목란에게 상을 주는 군주는 천자(天子)나 황제(皇帝)가 아니라 선비나 돌궐계 군주를 뜻하는 가한(可汗)이다. 화목란이 12년이나 군대에서 복무했다는 것도 중국 한족보다는 유목민족의 여성상을 암시한다.

북위를 건국한 탁발선비족은 선비(鮮卑)족 가운데 한 씨족(氏族)으로, '위서(魏書)'에 따르면 탁(拓)은 땅



알선동 유적

을, 발(跋)은 후손을 뜻한다. 선비족이라는 이름도 대 선비산(大鮮卑山)이라는 산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대 선비산이 어디인지, 그리고 '선비'라는 용어 자체는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다. 분명한 것은 탁발선비족은 땅과 산을 중시하는 민족이었다는 점이다.

386년 화북지방 통일한 탁발선비족

역사서에서 불분명한 탁발선비족의 기원에 실마리를 열어준 것은 1980년 7월 알선동(嘎仙洞)의 발견이었다. 중국의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와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북쪽 끝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발견된 이 동굴 내벽에는 북위 태무제(太武帝)가 443년 천지신

명과 조상들에게 기원한 내용을 적은 축문(祝文)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이를 통해 최소 탁발선비족은 그들의 기원을 다싱안링산맥 북쪽 끝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알선동 동굴에서 시작한 탁발선비족은 두 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이주한다. 먼저 다싱안링 서쪽 후룬부 이르 혹은 중국어로 후룬베이얼(呼倫貝爾) 호수 근처로 이주해 초원에서 유목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약 1만여 명의 기병을 보유할 정도로 국가 권력 기반을 강화해 재차 남쪽으로 이주했다. 그 결과 이들은 흉노의 옛 영토였던 지금의 네이멍구 허허허트 또는 중국어로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인근 성락(盛樂) 지방에 정착해 대(代)라고 하는 국가를 건국했다.

후한 말-삼국시대를 이어 중국을 통일한 진(晉)나라가 정치적 권위를 잃고 중국변경에 거주하던 이민족들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탁발선비족도 중국 역사에 중요한 행위 주체로 부상한다. 304년 진나라의 황실은 양자강 유역으로 피신해 동진(東晉)을 세웠으나, 화북지방에서는 이민족들 사이 거둬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 혼란의 시기를 마무리하고 386년 탁발선비족의 북위는 화북지방을 통일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북위가 중앙유라시아 전역에 중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탁발선비족의 '탁발'은 유목민 사이에서 '타그바치(Tagbachi)'로 불리다가 이후 발음이 편한 '타브가치(Tabgachi)'로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 '타브가치'라는 칭호는 이후 유목민들이 중국을 부르는 칭호가 된다. 돌궐족이 세운 비문 자료들에 보면 당시 당나라를 지

칭할 때 바로 ‘타브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3세기 칭기즈칸을 따라 중앙아시아를 여행한 도교(道敎) 전진파(全眞派)의 도사 구처기(丘處機)도 당시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도화석(桃花石)’으로 부른다고 증언하는데, 이는 ‘타브가치’를 음사한 것이다.

개방성과 수용성으로 중앙아시아 문화 받아들여

탁발선비족은 어떻게 중앙유라시아에서 중국을 대표하게 된 것일까? 먼저 탁발선비족은 중앙아시아 출신 소그드(Sogd) 상인들이 자유롭게 북중국에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중국 주요 도시에 소그드인들의 군락이 생겨날 정도로 중앙유라시아와 중국 사이 장거리 무역이 성행하게 됐다. 탁발선비족은 또한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번성하던 불교를 적극 받아들였다. 대규모 석굴사원으로 유명한 원강(雲岡)석굴과 룡먼(龍門)석굴은 모두 북위 시기 왕가

와 귀족의 후원으로 조성되었다. ‘서역’으로 가는 관문 도시였던 둔황, 즉 우리식으로 둔황(敦煌)의 천불동(千佛洞) 혹은 막고굴(莫高窟)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도 북위 시기였다. 중앙아시아 문화를 받아들인 데서 보이는 개방성과 수용성은 이후 북위를 이어 중국을 통일한 수(隋), 당(唐)나라 시대에도 계승됐다.

탁발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중국을 대표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화문명을 한족(漢族)이 세운 문화에 다른 민족들이 동화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반론의 여지가 크다. 오히려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와 양식이 중국을 대표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중국이라는 문명의 형성에 이러한 다양한 민족들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글 이광태(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일러스트 윤소영(soyoungyun.com)



원강석굴 10호굴 미륵상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져 시민이 행복한 수목원
대전 한밭수목원



대전 한밭수목원의 수생식물원 풍경



동원에 있는 튜립꽃밭



엑스포시민광장

대전의 중심지인 둔산에 위치한 한밭수목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속 수목원이다. 지리적으로 정 부대전청사와 엑스포과학공원의 중앙부분에 자리 하고 있는 이곳은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평송청소년문 화센터 등이 있어 대전 문화예술의 메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전 둔산대공원이었던 한밭수목원은 2005년 4 월 말 서원(西園)을 처음 개원하고 2009년 동원(東 園), 2011년 열대식물원을 조성해 지금의 모습을 갖 찼다. 37만1천㎡의 인공 구릉지에 무궁화원, 야생화 원, 관목원, 목련원, 암석원 등 24개 주제별로 목본 류 1천105종, 초본류 682종 총 1천787종의 식물자원 을 식재·전시하고 있다. 열대식물원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구의 탄소 저장소'라고 불리는 맹그로브원 도 조성돼 있다.

지금 한밭수목원은 새봄을 맞아 봄꽃들이 한창 이다. 수목원 주요 입구 및 화단에 튜립, 수선화, 무 스카리 등이 만개해 봄을 알리고 있다. 특히 수생식

물원 주변에 식재된 색색의 3만송이 튜립들이 화려 함을 더하고 있다. 따뜻한 날씨에 개화가 빨라진 벚 꽃도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진달래, 자두나 무, 조팝나무, 만첩홍도 등도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 내고 있다.

‘솔바람길’, ‘은빛여울길’ 등 산책로 인기

엑스포시민광장 양 옆으로 동원과 서원으로 나뉘 어 있는 한밭수목원은 발길 닿는 대로 가도 어디든 좋지만 한밭수목원에서 추천하는 산책로는 5개 코 스다.

‘솔바람길’은 ‘동원’의 바닥분수-대전사랑동산-목련 원-소나무원-암석원으로 이어진다. 소나무원에는 대 전의 시목(市木)인 소나무가 큰 숲을 이루고 있고 시 화(市花)인 백목련도 심어져 있다. ‘은빛여울길’(동원 바닥분수-장미원-향기원-수변데크-화목정-수변데 크-암석원)은 650m 거리로 40분 정도 소요된다. 크 고 작은 바위 사이에 숨은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암 석원, 5월이면 장미가 만발하는 장미원, 물 위의 정자



동원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모습

인 화목정은 방문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다.

‘장수하늘길’(동원 바닥분수-약용식물원-특산식물원-천연기념물 후계목-식이식물원-암석원)에는 보은 속리 정이품송, 예천 천향리 석송령 등 35개 종목의 후계목이 뿌리를 내렸다. ‘푸른숲길’은 소나무숲-침엽수원-참나무숲-서원 입구를 잇는 가장 긴 1km 산책로인데, 한 시간 가량 걷다보면 숲속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피톤치드’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든다. ‘속삭임길’(서원 입구-벚나무길-명상의숲-습지원-숲속문고-서측 입구)은 30분 코스인데 봄이면 노란 수선화 군락이, 여름이면 잎이 진 뒤 꽃이 피어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뜻하는 새빨간 상사화가 발길을 붙잡는다.

‘맹그로브원’ 만날 수 있는 열대식물원

동원에 위치한 열대식물원에는 맹그로브원, 야자원, 열대화목원, 열대우림원 등 4개의 주제원이 있다. 리조포라속 식물 등 198종 9천300여 본의 열대식물과 아열대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이곳의 자라는 맹그로브원으로, 국내 최초로 열대나 아열대지방의 갯벌이나 하구에서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줄기와 뿌리에 많은 호흡근을 가지고 있는 맹그로브 식물 21종을 심어 기르고 있다. 한밭수목원의 조승희 주무관은 “열대식물원은 종다양성의 증대와 관련 연구 및 실험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 주로 기후변화에 따른 열대식물의 재배를 시험하며 희귀식물을 보존하고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이국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밭수목원에서는 수목원 해설 사전 신청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소 1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이 사전 예약을 하면 숲해설가와 함께 수목원을 둘러보며 식물의 유래, 용도, 비슷한 식물 구분 등 풀과 나무에 대한 해설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대전시는 한밭수목원의 숲해설과 생태교육, 산림문화체험 등 모두 3개 분야 11개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숲해설 분야는 ‘교실 밖으로 떠나는 수목원여행’, ‘해설가와 함께 하는 수목원 야행’,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위한 ‘수목원에서의 하루’ 등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생태 분야에서는 유아(7세)를 대상으로 하는 ‘꼬맹이 생태학교’, 초등학생(1~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나는 수목원 생태학교’, 초등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교 숲을 활용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녹색 교실’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맞춤 프로그램이 준비

돼 있다.

특히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된 한밭수목원 대표 프로그램 ‘신나는 수목원 생태학교’는 식물·곤충·조류 등 주제별 탐구활동과 생태놀이, 만들기 등 6회에 걸쳐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 매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밖에도 산림문화체험 분야로 ‘자연물 공작교실’과 ‘도토리 책방’, ‘부모님과 함께하는 조물락 조물락’, ‘무궁화 체험행사’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대전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한밭수목원 동원 및 서원,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등 야외시설은 정상 개방하고, 열대식물원은 입장 인원을 제한해 매시 30분당 30명씩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문의 042-270-8452). 한밭수목원의 관람 및 개방시간은 하절기(4~9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열대식물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월요일 휴관). 📍

대전 | 글 고영선 사진 임진완



열대식물원의 맹그로브원



서원의 '명상의 숲'

유럽의 목욕 문화를 쇠퇴하게 만든 ‘매독’



전 세계 향수 산업의 중심지는 유럽이다. 특히 프랑스의 향수는 지금도 최고급 명품으로 통할 만큼, 그 명성이 자자하다. 이런 향수는 왜 유럽에서 발달했을까? 여기에는 다소 아름답지 못한 속사정이 있는데, 몸에서 풍기는 나쁜 냄새를 숨기기 위해서였다. 특히 16세기 이후로 접어들면서 유럽에서는 목욕을 하는 문화가 점차 쇠퇴해갔고, 유럽인들은 땀이 나도 잘 씻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서 나는 냄새가 그만큼 더 고약해졌다.

왜 유럽인들은 16세기 이후 목욕하기를 꺼려했을까? 이는 매독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었다. 매독은 매독균이 성관계를 거쳐 피부에 감염되는 병이라서 성병에 속한다. 일단 걸리면, 처음에는 성기와 항문 부위에 궤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몸무게가 줄어들다가 치매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인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얼굴이 썩고 코가 떨어져나가며 대변과 소변을 볼 때마다 피를 흘리다가 결국 체력이 쇠약해져 죽고 만다.

하지만 매독이 반드시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매독에 걸린 환자가 목욕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나온 뒤, 아직 매독에 걸리지 않은 다른 사람이 그 목욕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면, 이전에 들어갔던 매독 환자의 피부를 통해 물에 퍼진 매독균이 새로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는 매독 감염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목

욕을 통해 매독에 걸리게 된다.

이런 특성 때문에 16세기 이후로 유럽인들은 “목욕을 하면 매독에 걸릴지 모른다”라며 점차 목욕하기를 꺼려했다. 한 예로 프랑스 국왕인 루이 14세는 몸에 땀이 나면 목욕을 하는 대신 옷을 새로 갈아입었고, 그래서 몸에서 나는 악취가 굉장히 심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사정은 비단 루이 14세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사람들 대부분도 비슷했다.

게다가 근대 이전, 유럽의 목욕탕은 딱히 깨끗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당시 유럽의 목욕탕은 지금처럼 기계로 물을 쉽게 뺏다가 넣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물을 넣는 방식이어서 물을 갈기가 어려웠다. 더군다나 유럽인들은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냥 몸만 씻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음식과 술을 먹거나 심지어 매춘부를 불러 성관계까지 했기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지저분했다. 이런 사정도 있어서 더더욱 유럽인들은 목욕하기를 꺼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매독은 언제부터 등장했을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나, 가장 믿을 만한 내용은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와 함께 항해에 참가했던 선원들이 신대륙 원주민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때 매독에 걸린 원주민 여성들이 있어서 그런 성접촉을 통해 선원들이 매독에 걸렸고, 다음 해인 1493년 콜럼버스와 선원들이 유럽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을 통해 매독이 유럽에

널리 퍼졌다는 것이다.

1494년 매독은 남유럽 이탈리아의 남쪽의 항구 도시인 나폴리에서 발견되었는데, 하필이면 나폴리를 침공했던 프랑스 군대가 나폴리의 사창가에 들러 매춘부들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집단으로 매독에 감염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매독은 유럽 각지로 매우 빠르게 퍼져 나갔고, 어느새 유럽의 풍토병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 매독이 유럽에 얼마나 널리 창궐했느냐 하면, 유럽에서 웬만큼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매독에 걸려 죽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다. 매독에 걸려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대략 거론하자면 러시아의 황제인 이반 4세,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 오스트리아 음악가 슈베르트, 독일 음악가 슈만 등이다. 과거에는 매독이 평소 상상하기 어려운 기발한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매독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의 천재성을 발휘했다는 설도 제기됐다. 이반 4세는 러시아를 통일시켜 동유럽의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모파상은 ‘목걸이’와 ‘사랑은 죽음보다’를 비롯해 환상적인 여러 소설들을 썼으며, 슈베르트와 슈만은 평범한 음악가가 만들기 어려운 명곡들인 피아노 5중주 가장조 ‘송어’와 교향곡 1번 B플랫 장조 ‘봄’ 등을 작곡했다. 어쩌면 매독의 창궐로 인해 유럽 역사에서 광기있는 천재들의 세기가 탄생했는지도 모른다. 🍷

글 도현신 작가

재현의 회화술을 넘어서는 사건으로서의 회화

공성훈의 회화에는 드라마가 있다. 조금만 움직이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장소들, 가령 바닷가나 폭포 등과 같은 곳의 장면을 화폭에 담는 것이 그의 회화 작품의 대강이다. 그곳은 풍경으로서의 자연이 존재하는 곳이지 인간이 등장해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드라마가 펼쳐진다니, 뭔가 각별한 장치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인간의 관점에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 드라마를 펼치는 비결은 풍경을 풍경만으로 대하지 않고 그 풍경 속에 상황을 대입하는 회화술에 있다.



공성훈 '폭포' 100×200cm, 캔버스에 유채

국회소통관 1층 복도에 자리 잡고 있는 공성훈의 '폭포'는 1미터 폭에 2미터 높이의 회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회화라는 장르가 동시대에 예술 공론장에서 자리매김하는 방식에 대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가 그려내는 자연은 그냥 자연이 아니라 대상화된 자연이다. 마치 연극무대처럼 잘 꾸며진 자연, 장소의 맥락에 맞게 세팅한 자연이다. 그것은 현대사회의 문명체계가 자연마저도 인간의 통제와 조율을 통해서 가공된 이미지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잘 그려진 자연풍경을 감상하며, 자연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인간문명의 번잡함을 덜어내는 전형적인 산수풍경과는 차원이 다른 풍경화다.

전통적인 풍경화와 차별화 이뤄

화가 공성훈은 자연의 모습을 그린 예술가다. 그는 '자연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통해 '대상화된 자연의 상황'을 함께 보여준다. 그의 회화 속에 등장하는 자연은 숭고하고, 엄숙한 공간이지만, 그것은 전형적인 장면으로서의 자연이기도 하다. 마치 기념엽서에 등장하는 이미지와 같은 전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인간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 스스로 그려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념과 문화, 제도를 통해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로서의 자연인 것이다.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자연은 대상화한 자연이므로, 전통적인 풍경

화가 주제로 삼아온 재현 회화로서의 풍경화와 차별화한다.

공성훈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미디어아트 실험을 주로 했던 예술가다. 그는 슬라이드 프로젝션으로 정지화면들을 연결해 일종의 애니메이션과 같은 장면과 상황을 연출하며 주목받는 신진 예술가로 자리매김했다. 중년을 지나면서 회화에 집중했다. 이 인성미술상 수상자로서 공성훈은 '사건으로서의 풍경'이라는 주제로 수상자 개인전을 열었다(2018년). 대구미술관 전시장을 가득 채운 이 전시에서 공성훈이 보여준 그림들은 동시대 미술에서 풍경화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다.

공성훈 회화의 특징은 재현적인 풍경을 사건으로서의 풍경으로 전환하는 특유의 서사구조에 있다. 그것은 문학적인 서사와 다른 시각서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현이란 무엇인가? 한자말로 '재현(再現)'은 '다시 나타난다'는 뜻이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즉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과 사건 즉 대상들은 우리 앞에 나타남으로써 눈을 통해 보이는 존재다. 그것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뜻의 '현현(顯現, present)'이다. 인간 앞에 나타나 눈에 보여짐으로써, '나타났던' 대상이 '다시 나타나' 상황이 바로 다시 재(再), 나타날 현(現), '재현(再現, represent)'이다. '다시 나타난다'는 것의 의미는 육안을 통해 나타내졌던 사물이 그림을 통해 다시 나타났다는



국회소통관 1층 복도에 전시된 공성훈 작가의 '폭포'

것을 의미한다.

현현으로서의 자연과 재현으로서의 회화 사이에 흐르는 이 문명사적 의미는 현대미술에서 매우 중차대한 변곡점이다. '나타내 보이는 기술'로서의 회화술은 기본적으로 재현회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재현회화술을 구사하면서도 재현 이상의 서사를 만들어냈다. 그는 대상물을 나타내 보이는 데 목표를 두지 않고 그것을 보는 관람객이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치열하고 치밀하게 선과 색과 면과 색감과 질감과 서사구조를 직조한다. 그의 재현은 3차원 공간 속의 대상을 2차원 평면 속에 옮기는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관람자로 하여금 '심리적 불안감을 갖게 하는 사건으로서의 풍경'이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관조적 시선의 목가적 전원 풍경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열차게 충돌하는 현장의 풍경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풍경 속에 격렬한 사건을 집어넣는 건 아니다. 오히려 사건이 벌어진 직후의 장면을 담아서 은유적으로 사건의 함의를 성찰할 수 있게 만든다. 그는 '그림이란 순간순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결단의 연속'이며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화가로서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현회화의 전통을 새로운 단계의 서사로 이끌어 사건으로서의 풍경이라는 드라마를 썼던 공성훈. 얼마전 50대 중반 나이에 홀연히 세상을 등진 그가 남긴 그림을 통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

글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사진 김지범



진분홍색으로 물든 ‘꽃잔디’

국회소통관 앞 한쪽이 진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잔디 같지만 아름다운 분홍 꽃이 피는 ‘꽃잔디’입니다. 주로 5월 중순쯤 만개하는 꽃잔디는 패랭이꽃과 비슷하고 양탄자처럼 지면으로 퍼지기 때문에 ‘지면패랭이꽃’이라고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국회에도 완전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봄의 향연’입니다. 🌸

글 박민선 사진 김진원



1937년 충남 부여 백마강변에서 출토된 산수무늬 벽돌(백제 7세기)

그림보다 더 그림 같은 백제 ‘산수무늬 벽돌’ (山水文磚)

1937년 3월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의 백마강변. 이곳의 야트막한 산기슭에서 한 농부가 나무뿌리를 캐고 있었다. 나무뿌리 옆으로 벽돌과 기와 몇 개가 눈에 들어왔다. 확인해보니 무늬가 있는 벽돌(전돌)과 막새 기와였다. 그는 곧바로 부여경찰서에 신고했고 조선총독부는 다음달부터 공식 발굴에 들어갔다.

그렇게 세상과 만나게 된 백제의 벽돌들.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로 40여 점이 출토되었고, 표면에 장식된 무늬를 분류해보니 8종이었다. 무늬는 다채롭고 인상적이었다. 산수무늬, 산수봉황무늬, 산수도깨비무늬, 연꽃도

깨비무늬, 용무늬, 봉황무늬, 연꽃무늬, 연꽃구름무늬. 이 무늬 벽돌(장식 벽돌)들은 7세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벽돌 하나하나의 크기는 한 변이 29cm이고, 두께 4cm 정도. 모두 틀로 찍어 제작했으며 무늬는 얇은 부조(浮彫) 형식으로 확인됐다. 이 때 발견된 40여 점 가운데 8점이 현재 보물 343호로 지정되어 있다. 8종의 무늬 벽돌 가운데 종류별로 상태가 좋은 것 하나씩을 골라 보물로 지정한 것이다. 한 세트가 보물로 지정된 셈이다.

8종의 무늬는 하나같이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산수 무늬는 평화롭고 은은하다. 용은 역동적이고 봉황은 우아하다. 연꽃은 부드럽고, 연꽃 주변을 휘감고 도는 구름은 리드미컬하다. 육중한 도깨비는 무시무시하지만, 도깨비가 바위산이나 연꽃 위에 올라탄 듯한 모습을 보면 익살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 옛날에 이렇게 재미있고 멋지게 벽돌을 디자인을 했더니, 백제인들의 미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백제 사람들은 이 벽돌을 바닥에 깔았거나 벽에 붙여 장식했을 것이다. 무늬 벽돌 8종의 모퉁이에는 서로 연속하여 고정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8종의 무늬벽돌 한 세트를 들여다보면 무언가 스토리가 담겨 있을지 모른다. 만약 스토리가 있다면 7세기 백제인들의 생각이나 일상 같은 것이 아닐까. 또한 백제인들의 미의식이나 낭만 같은 것도 담겨 있지 않을까.

한 폭의 산수화가 연상되는 산수무늬 벽돌

모두 흥미로운 백제의 무늬벽돌이지만, 이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낯익은 것을 고르라면 산수무늬 벽돌(산수문전, 山水文塼)을 들 수 있다. 이 산수무늬 벽돌에는 산과 나무, 바위와 물이 등장한다. 그런데 그 풍경이 깊고 그윽해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시킨다. 이 벽돌이 가장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산수무늬 벽돌의 화면 구성과 관련해 흔히들 하단, 중단, 상단으로 구분한다. 하단에는 물결을, 중단에는 산악을, 상단에는 하늘과 구름을 표현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맨 아래에는 층을 이루듯 가로로 계곡의 물줄기를 표현했다. 물줄기를 가로로 길쭉하게 표현한 것이 좀 이색적이다. 물줄기 바로 위로는 기암절벽이 뾰족하게 솟아있고 이어 산과 나무들이 보인다. 벽돌 한가운데에 산과 바위를 짝 차게 배치한 것이다. 기암절벽은 수직으로 솟아나 거칠고 강하지만 산들은 부드럽고 원만하다. 그 대비가 두드러져 눈길을 끈다.

산들은 봉우리 세 개가 짝을 이루고 있다. 가운데 봉우리가 크고 좌우 봉우리는 작다. 산봉우리에는 나무들이 많다. 나뭇잎은 풍성하고 그래서 나무들은 싱싱해 보인다. 하단의 기암절벽과 산속 바위들을 보면 살쾅살쾅 빗금이 여러 개씩 표현되어 있다. 그 의도와 의미를 알기는 어렵지만 이 빗금으로 인해 전체 풍경에 생동감이 흐른다.

하늘을 표현한 상단을 보자. 여유롭게 구름이 흘러간



산수무늬 벽돌과 함께 출토된 산수봉황무늬 벽돌(백제 7세기)



산수무늬 벽돌 가운데 집과 인물 부분

다. 그런데 그 구름 모양새가 좀 색다르다. 꼬리가 말린 듯한 모습이다. 약간 도식화된 느낌을 주지만 그림에도 무언가 영험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보니 이 구름을 서운(瑞雲)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함과 세련미가 조화를 이루면서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 잡는다. 부드러운 산봉우리들이 중첩되면서 안정적인 리듬감을 만들어낸다. 부여 외리에서 함께 출토된 산수봉황무늬 벽돌에도 산이 나오고 구름이 나온다. 그런데 이것보다 산수무늬 벽돌의 디자인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다. 더 회화적이며 더 깊이가 있다. 빼어난 공간 구성 덕분에 벽돌 전체에 입체감이 잘 드러났다. 산봉우리들은 유려하고 리듬감이 넘친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이 있다. 산 속에 집 한 채와 사람이 등장한다는 사실. 잘 들여다보면, 하단의 암벽 바로 뒤쪽(산수무늬 벽돌 전체를 놓고 보면 아래에서 3분의 1 높이)의 한가운데 산에 팔작지붕 모양의 건물이 있다. 지붕에는 뾰족 솟아오른 치미(鷗尾)도 보인다. 주변을 둘러보니, 바로 옆 오른쪽 바위에 사람이 있다.

그 집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다. 스님 같기도 하고 도인(道人) 같기도 하다. 무언가 범상치 않아 보인다.

산수무늬 벽돌은 편안하고 원만하다. 은근한 아름다움이 있다. 이 산수무늬 벽돌을 보고 있노라면, 1천300여 년 전 백제인을 따라 충청도나 전라도 어디쯤 산중을 걷는 것 같다. 기암절벽을 지나고 계곡의 물길을 지나 산 속에 이르니 거기 사찰(사찰인 듯한 공간)이 나오고 누군가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왜 저리로 가는 것일까. 이 풍경의 분위기는 도교적이면서 불교적이다. 동근 산 위의 풍성한 소나무들은 신선이 산다고 하는 봉래산을 떠올리게 한다. 벽돌에 표현한 이 풍경은 7세기 백제인들이 꿈꾸었던 이상향이 아니었을까. 그림보다 더 그림 같은 멋진 벽돌. 보는 이를 호기심과 함께 깊은 사유의 세계로 이끈다.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이 무늬 벽돌 8종을 선보이는 특별전 ‘백제 산수문전’이 열리고 있다. 1천300년 전 백제인의 미감에 취해볼 수 있는 귀한 자리다. 

글·사진 이광표(서원대 문화유산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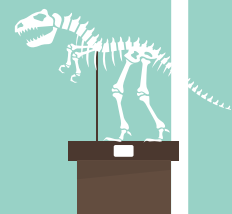
NATV가 만드는 지역예술 재발견 프로그램



우리 동네 미술관

미술 여행의 스펙트럼을 넓힌다

미술의 세계로 다가가는
재미나고 별난 통로!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우리 동네 미술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월요일 밤 10시 30분 방송

진행 신아영 아나운서

진행 김찬용 도슨트

국회방송  NATV
www.natv.go.kr



높은 산 맑은 물에 깊어지는 문학의 향기, 사람의 향기

충북 단양 도담삼봉. 퇴계는 단양 군수를 지내는 동안
도담삼봉의 경치를 담은 시를 짓기도 했다.

충북 단양군 문학기행

단구동문(丹丘洞門), 퇴계가 단양으로 들어가는 뱃길 초입 옥순봉 절벽에 새긴 글자라고 전해진다. 그 옛날 환란이나 전쟁, 질병조차 범접하지 못했다는 십승지 중 한 곳이 충북 단양에 있었다 하니, 자연의 청정함은 물론, 그 정기마저 맑았던 까닭일까? 높은 산 깊은 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는 단양은 시인 묵객의 순례지이자 은거의 땅이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천재 시인들의 눈에 비친 단양을 보았다.



사인암에서 우탁이 남긴 두 편의 시를 읽다

너럭바위를 부술 듯 제 몸 뒤틀며 흐르는 냇물이 물 밑에 뿌리를 둔 수직 절벽, 사인암 앞에서 잣아든다. 사인암 부근에 우탁의 시비가 있다.

고려시대 사람 우탁은 단양 사람이다. 그는 사인암과 냇물이 어울려 만들어내는 풍경을 좋아했다. 조선시대 성종 임금 때 단양군수를 지낸 임재광이 그를 기리기 위해 푸른 물결 굽이도는 물가 우뚝 선 바위 절벽에 사인암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우탁이 지냈던 벼슬인 '사인(고려시대 종4품 벼슬)'을 그 풍경의 이름으로 부른 것이다.

사인암 주변, 너럭바위 위로 기운차게 흐르는 냇물 옆 제멋대로 자란 소나무 두 그루가 인상적이다. 그 소나무 뒤에 우탁의 시를 새긴 시비가 두 개 있다.

한 손에 가시를 들고 또 한 손에 막대를 들고
늪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드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어 간데없다
적은 듯 빌어다가 머리 위에 불리고저
귀밑의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사인암 부근에 우탁 시비가 있다. 세차게 흐르는 물줄기 옆 두 그루 소나무가 인상적이다. 소나무 뒤에 시비가 있다.

사인암에 은거하던 우탁도 세월을 비켜가지 못했다. 백발이 된 우탁은 푸른 물과 하늘을 향해 솟구친 기상 높은 사인암을 앞에 두고 바람 따라 가벼린 푸르른 젊은 시절을 생각했나 보다.

우탁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숙종 임금 때도 거론된다. 숙종 임금은 학문이 깊고 절의가 높은 우탁의 사람됨을 높이 사서 우탁의 서원에 사액했다. 역동이라는 액호를 내린 것이다.

우탁의 시비에 새겨진 시를 읽고 흐르는 물을 따라 사인암으로 향했다. 출렁다리를 건너 우뚝 솟은 사인암을 바라본다. 사인암 바위 절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글이 새겨졌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는 사인암을 그렸고, 그 절벽에 이름을 남겼다고 한다. 추사 김정희는 사인암을 두고 하늘에서 내려온 한 폭의 그림 같다고 했다. 사인암은 옛 시인 묵객들의 순례지였다. 그 사람들 중에 퇴계 이황도 있었다.

퇴계의 친필이 새겨진 두 개의 바위

퇴계는 짧은 기간 단양 군수를 지냈지만, 그의 흔적은 단양 곳곳에 남아 있다. 옛 단양의 중심지였던 단성면 하방리 '수몰이주기념관' 건물 앞, 글자가 새겨진 바위와 비석들 가운데 '복도별업'과 '탁오대' 암



사인암. 수직 절벽과 푸른 물이 어울려 아름다운 풍경을 만든다.



이황의 친필로 새긴 글자라고 알려진 탁오대암각자



소금정원에 있는 권섭 상과 시비

각자는 퇴계 이황의 친필이라고 전해진다.

퇴계는 단양 군수 시절 복도소(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든 저수지)를 만들고 그 근처에 집을 짓고 때때로 경치를 즐기며 쉬었던 모양이다. 그곳 바위에 ‘복도별업’이라는 글자를 새겼는데, 충주댐이 생기면서 복도소가 물에 잠기게 되자 글자가 새겨진 부분만 잘라 현재 자리에 옮겨놓았다.

‘탁오대’라는 글이 새겨진 바위는 단양천 상류 우화교 부근에 있었다. 단양 군수를 지낼 때 퇴계는 우화교 부근 계곡을 좋아했다고 한다. ‘탁오’란 말은 중국 시인 굴원의 ‘어부사에 나온다.

창랑지수청혜(滄浪之水淸兮) 가이탁오영(可以濯吾纓)
창랑지수탁혜(滄浪之水濁兮) 가이탁오족(可以濯吾足) -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

이 글은 아마도 사람이 세상에 들고남에 있어 자신을 알고 때를 알아야 한다는 뜻은 아닐까? ‘탁오대암각자’도 충주댐이 생기면서 물에 잠기게 되자 지금의 자리로 옮긴 것이다.

퇴계는 단양 군수를 지내는 동안 단양의 여러 곳을 돌아봤다. 그중 여덟 가지 경치에 대해 쓴 ‘단양산수기’라는 글과 시를 남겼다. 그중 도담삼봉의 경치를 담은 시를 소개한다.

산은 단풍잎 붉고 물은 옥같이 맑은데
석양의 도담삼봉에는 저녁 노을 드리웠네
신선의 뗏목을 취벽에 기대고 잘 적에
별빛 달빛 아래 금빛 파도 너울지더라

구담의 선인들

단양으로 들어가는 뱃길 초입 옥순봉 절벽에 퇴계가 단구동문(丹丘洞門)이라는 글자를 새겼다고 한다. ‘단구’는 ‘단양’을 말하는 것이니, 신선들이 살 것 같은 단양의 수려한 풍경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것이다.

평균 수심 100m에 육박하는 충주호가 생기면서 물 아래 풍경을 지웠으니, 퇴계가 보았던 풍경을 온전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옥순봉을 지나면 구담봉이다.

구담은 현재의 구담봉을 아우르는 그 주변 지역을 일



구담봉 정상에서 본 충주호 풍경

권는 옛 이름이다.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1676~1759)과 이방운이 구담을 그렸다. 해발 300m가 넘는 바위 절벽 봉우리가 남한강 강바닥에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그림에서 퇴계를 비롯한 옛 시인묵객들이 보았던 그 풍경을 보았다.

조선시대 사람 이지번은 구담에 사는 신선이라고 해서 구선(龜仙)이라 불렸다.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의 동생이자 명종의 삼촌인 윤원형은 당대에 권력의 전횡을 일삼았다. 이에 이지번은 동생인 이지함과 단양 구담에 내려와 은거했다. 이지함은 바로 토정비결로 잘 알려진 그 사람이다.

이지번의 아들 이산해는 삼촌인 이지함에게 학문을 익히기도 했다. 훗날 그는 영의정까지 지냈으며 복인의 영수로 정철, 유성룡과 정치를 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을 잘 지어 신동으로 불렸다. 다섯 살에 가난해서 아픈 마음을 달을 보며 위로한다는 내용의 시를 짓기도 했다. 어

린 나이에도 가난함을 돌볼 줄 아는 그 마음이 시를 잘 짓는 천재의 재능보다 더 뛰어나다.

구담에 대한 시를 쓴 사람이 또 있으니 그가 바로 조선 후기 최고의 시인 권섭이다. 권섭은 당쟁의 피바람을 피해 전국을 떠돌며 글을 지으며 사는 쪽을 택했다. 3천 편이 넘는 한시와 75편의 시조, 2편의 가사가 지금도 남아 있다. 그중 '황강구곡가'는 이이의 '고산구곡가'의 맥을 잇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 그가 단양의 풍경을 읊은 시가 '구담'이다.

구곡은 어드메오

일각이 그 뉘러니

조대단엽이

고금에 풍치로다

저기 저 별유동천이/천만세인가 하노라

그의 시 '구담'을 새긴 시비가 단양읍 소금정공원에 있다. 📍

글·사진 장태동(여행작가)

자주 쓰는 ‘약어’라도 본말과 함께 사용하세요

공문서에서 축약형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까? 약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영어에서 축약형이란 아포스트로피를 사용하거나 아포스트로피 없이 두 단어를 하나로 줄여놓은 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어 ‘can not’을 ‘can’t’로, ‘Mister’를 ‘Mr.’로 쓰는 식이다. 한국어에서 축약형이란 모음축약을 일컫는데 ‘제출하여’를 ‘제출해’로 쓰는 식이다. 법제처(2020)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에서는 일반적인 언어 습관을 고려하여 공문서에서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글을 “말하듯이 쓰라”는 읽기 쉬운 글쓰기 원칙을 따른 것이다.

- (1) **예** 부안군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군청, 기획감사담당관 보도자료, 2021. 1. 28.)
- (2) **예** 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사항 전부에 대해 국내출원보정서를 통해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보도자료, 2021. 2. 1.)

위의 사례에서 ‘위해’는 ‘위하여’의 축약형이고, ‘했다’는 ‘하였다’의 축약형이다. 이러한 축약형은 같은 문서 내에서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축약형이 더 자연스럽고, 가독성도 높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문서 내에서 본말과 축약형을 혼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약어는 축약형과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표현의 경제성을 고려해 각 단어의 초성을 따서 만든

말이라는 점에서 축약형과 조금 다르다. 영어에서는 ‘United Nations’를 ‘UN’으로, 한국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문체부’로 적는 식이다. 그런데 약어는 아무리 자주 쓰는 형태라 하더라도 축약형과 달리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 (3) **예** 1998년 IMF 때 사단법인으로 문을 열어 기업이나 개인이 기탁한 식품, 후원금, 성남시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청, 성남시 ‘거점형 이동 푸드마켓’ 3곳 설치, 2021. 3. 18.)
- (4) **예** 각 부처와 지자체는 특정한 분야나 지역의 입장을 떠나, 모두 ‘스스로가 중대본부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2021. 1. 15.)

위의 사례에서 ‘IMF’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약어로 보기 어렵다. 의미상 ‘외환위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약어를 잘못 사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대본’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중앙대책본부’의 약어인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약어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어를 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약어를 사용할 때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처럼 먼저 본말과 약어를 함께 제시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아무리 자주 사용하는 약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

글 김형주(상명대 국어문화원 특임교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안보고

4월 1일

-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4월 2일

-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이틀간 전국 722개소 투표소에 서 실시

4월 5일

- 더불어민주당, 내국동 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

4월 7일

-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 서울·부산시장 각각 당선

4월 12일

- 신임 청와대 정부수석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정

4월 14일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에 대해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제국주의적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
- 정의당,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일본대사관에 항의 서한 전달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탈당

4월 16일

- 문재인 대통령, 후임 국무총리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해양수산부 장관에 박준영 현 해수부 차관, 고용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 상임위원 지명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윤호중 의원 선출
-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합당 결의

4월 18일

- 당정청, 비공개 협의체를 열고 현행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기로 합의

4월 19일

- 박병석 국회의장,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4·19민주묘지 참배
- 국회, 사흘간 대정부 질문 실시

4월 20일

- 여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차별 철폐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 외교통일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안보고 실시, ‘예방외교 실패’ 한목소리 질타

4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 “국민공감대·국민통합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 무소속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 더불어민주당,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혀

4월 22일

- 국민의힘,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제 15년 만에 폐지

4월 26일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9천900만 명 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해 집단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혀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한 것에 대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해

정리 윤성혜



4월 27일 국회 입법차장 회의실에서 국회를 심의 중인 국회홍보출판위원회의 전상수 위원장(가운데·입법차장)과 위원들

〈편집후기〉

‘길에서 길을 찾다’ 취재를 위해 찾은 충북 증평과 진천, 음성은 수채화를 닮은 봄빛이 가득했습니다. 머지않아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 이 싱그러운 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리라. 물씬한 봄향기에 희망을 되새겨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소중한 5월 되시길 바랍니다.

- 김현아

국회보에는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보 실무진이 마련한 편집안은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를 거쳐 국회홍보출판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고영선

이번호 ‘법시행 그후’ 코너에서 다룬 ‘중소기업기본법’ 취재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힘내세요!

- 박민선

“어린이날이 다가온다.”며 들떠있는 아이들을 보며 ‘나는 최근 무엇에 설레었나’ 생각해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모든 것이 아쉽지만 코로나19 일상을 조금 더 뜻깊고, 슬기롭게 보내는 나만의 설레임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가정의 달 보내세요.

- 윤성혜



TV로도 즐기고
폰으로도 즐기고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국회방송 NATV

국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채널

IPTV
olleh tv
65

IPTV
SK broadband B tv
65

IPTV
U tv
172

skyLife
165

케이블 방송
지역에 따라 채널 번호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 방송국에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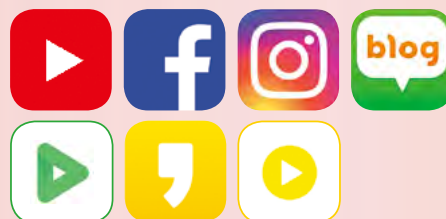
텔레비전이 없어도! 본방사수를 못해도!!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국회방송'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생방송 시청과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국회방송 앱



●소셜미디어 채널



국회방송  **NATV**
www.natv.go.kr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